
2013 녹색당 동시다발 지역정책활동 <세바지> : 방사능 안전급식 정책토론회

어린이·청소년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제정 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

- 주최 | 녹색당·서울녹색당·경기녹색당
- 일시 | 2013년 10월 11일(금) 오후 4시
-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아트컬리지(3)

녹색당
GREEN PARTY KOREA

어린이·청소년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제정 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

우리는 지금 파악조차 불가능한 방사능의 위협 속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방사능에 취약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은 어린이집과 학교의 급식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정부는 책임을 방기하고 있지만, 녹색당은 풀뿌리활동단체, 지역주민들과 함께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학교급식을 지키기 위해 적극 대응하며, 모범조례(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제(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9월에는 미진하긴 하지만 서울시에서 방사능 안전급식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녹색당은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학교급식뿐 아니라, 방사능 안전급식의 사각지대인 어린이집 급식까지 확대적용하는 조례내용을 제안합니다. 이와 함께 지역차원의 동시다발 조례제(개)정 운동을 제안합니다. 녹색당이 제안하는 조례제(개)정 운동은 이름뿐인 조례가 아닌, 어린이와 청소년을 방사능 오염의 위협에서 지켜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만드는 지역의 정책활동이 될 것입니다.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 사회 : 이유진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 기초발제

1. 서울시 방사능 안전급식을 위한 조례제정의 의미와 실천과제
| 전선경 (방사능시대, 우리가 그린 내일 운영위원)
2. 방사능 안전급식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별 현황과 정책과제
|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지정토론

1. 이윤숙 | 한국YWCA연합회 생명비전연구소 부장
2. 안명균 | 경기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3. 박설희 | 강원녹색당 운영위원장
4. 강언주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5. 이보아 | 녹색당 탈핵특별위원회 위원장

차 례

서울시 방사능 안전급식을 위한	
조례제정의 의미와 실천과제	5
방사능 안전급식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별	
현황과 정책과제	18
토론문 1	40
토론문 2	45
토론문 3	58
토론문 4	74

기조발제1

서울시 방사능 안전급식을 위한 조례제정의 의미와 실천과제

전선경 | 방사능시대, 우리가 그린 내일 운영위원

방사능안전급식조례안의 확산 의미와 실천과제

전선경 (방사능시대 우리가 그린 내일 운영위원, 서울시 광역친환경급식위원)

1. 들어가며

일본의 방사능오염수 방출과 방사능과담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전까지 학교 급식에 오르는 수산물 걱정은 일부 소수 부모들의 걱정으로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 도시락을 지참시켜 보내는 부모, 아이에게 급식에서 수산물을 주의하라고 하는 부모부터 전전긍긍 혹시나 방사능오염식품을 먹게 될까봐 걱정과 불안을 보내는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우선적으로 학교방사능급식 조례안이 발의되어 미흡하나마, 아이들 안전 급식에 근거점은 마련되었습니다만, 학부모와 시민과 전문가 구성의 감시위원회의 통삭제, 기준치의 명확한 명시가 없어서 실제 실무에서는 우왕좌왕할 우려를 많이 놓고 있습니다. 핵심 알맹이 중 몇몇이 빠지긴 하였으나 서울시 조례는 초안의 마련에서 통과까지 20여일의 짧은 시일 내 이루어졌지만 ‘긴급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점, 그리고 앞선 경기도 조례의 핵심적 문제 일부를 보완했다는 점에서 이후 다른 지역의 조례 제정 과정에서도 참고할 점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녹색당이 자체적으로 방사능, 먹거리 조례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 조례안의 초안을 만들어 둔 것이 본(서울시) 원안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 서울시 조례제정의 경과와 의미

서울시 조례 제정 과정 자체는 급박하게 이루어졌으나, 사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위한 시민들의 활동은 거의 후쿠시마 직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공식적인 흐름으로 처음 드러나고 조례의 형태로 만들어진 최초 결과물이 경기도 조례입니다. 그러나 그런 점에서 방사능안전급식을 희망해 왔던 시민들에게 경기도 조례는 더더욱 실망스럽고, 이후 영향을 고려할 때 이것이 기준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을 안겼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가 더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 추진의 시작은 사실 서울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가 올해 3월 방사능오염 대응 안심수산물 체계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한 민·관·학·연 운영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는 급식식단에 사용하는 수산물 중 가장 많이 사용하면서도 이력추적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품목인 ‘다시멸치’를 선정하여 방사능오염 대응 안심수산물 체계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7월에는 방사능 오염 대응 안심수산물 공급방안 모색 및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이해 당사

자들과의 직접 소통의 자리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의 일환으로 녹색당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방사능시대, 우리가 그린 내일’ 등이 조례 추진을 타진했고, 이에 8월 초 서울시의회 김형태 교육의원이 의회 차원에서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 조례』를 추진할 계획을 밝힌 것입니다. 이후 8월 중순부터 긴급하게 시민사회의 의견을 토대로 초안이 마련되었으며, 8월 26일 ‘서울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대공청회를 열어 조례 제정의 근거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녹색당은 공청회를 앞두고 방사능안전급식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조례 제정을 함께 추진하고자 하는 18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긴급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공청회 당일 오전, 정부의 방사능안전관리체제의 허술함을 비판하고 방사능안전급식 조례 제정에 반드시 답아야 할 요구를 밝히는 방사능안전급식 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함께 공청회에도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녹색당은 이 공청회에서도 발표된 녹색당의 조례 초안을 바탕으로 8월 28일에는 학교급식에서부터 방사능물질을 체계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성 물질 검사 및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발표하고, 각 지자체에서 관련된 조례를 제정할 때 반드시 이런 내용을 반영시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후에도 9월10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서울특별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심의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시의회의 방사능안전급식 조례 제정 촉구에 다시 한 번 초점을 맞춰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방문해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고 방사능안전급식 조례가 온전한 내용으로 통과되기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9일과 10일 제출된 서울시 교육청(체육건강청소년과)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시민사회의 요구와 갈리는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반박하는 내용을 담아 의원들이 심의에 참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9월 10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는 ‘서울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이 심의되기도 전에 의결정족수 미달로 유예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일 조례안 제안 설명부터 의결정족수 미달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상당수 의원들에게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이 걸린 이 방사능안전급식 문제가 결코 긴급하지 않은 사안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례안 심의를 둘러싼 진통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논의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앞서 대표발의를 한 김형태 교육의원은 8월26일 자체적으로 조례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당시 최홍이교육위원장을 비롯해 최명복, 윤명화 부위원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청회를 생략할 것인지를 논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찬반 토론에서 새누리당 전종민 의원은, ‘비행기 탑승 시 또는 X-Ray나 CT 촬영 시에도 방사선에 노출된다’는 등의 발언을 비롯, 방사능에 대한 안전불감증을 그대로 드러내며 공청회 개최를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상 조례안에 대한 반대 취지의 발언으로, 이번 회기에서 조례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이후로도 정치성과 당파성이 거론되는 등 격론을 벌이던 새누리당 전종민(송파구), 이지현(서초구) 의원과 정상천(교육의원) 의원, 최명복 부위원장은 급기야 회의장을 퇴장하였습니다. 퇴장한 의원들 뿐만 아니라 회의에 아예 참석조차 하지 않거나 수시로 자리를 뜨는 등 회의장을 지키지 않는 의원도 다수였습니다. 결국 이 날 조례안 심의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유예되었으며, 이때 자리를 지키지 않은 의원들은 공교롭게도 모두 조례안의 발의에 참가하지 않은 의원들이었습니다. 이 과정은 분명한 시사점을 줍니다. 아직도 다수의 의원 그리고 교육청에는 이미 2년 반이나 되는 시간동안 아무런 대책없이 일본산 수산물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급식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의원들에게는 세계가 분노하고, 핵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마저 심각하게 우려하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도 긴급한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방사능에 오염됐을지 모를 급식 때문에 도시락을 싸는 학부모의 심정은 떨기만 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진통 끝에 통과될 수 있었던 데에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시민사회의 공식적인 흐름 외, 학부모들의 의원들에 대한 직접 민원과 면담, 녹색당원 및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의 빗발치듯 쏟아지는 SNS 대응이 사실상 조례 제정의 힘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가장 압박을 받았다고 호소했을 정도입니다.

결국 짧지만 이러한 격론 속에 애초 “서울특별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으로 출발했던 방사능안전급식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라는 명칭으로, 그리고 핵심 조항들도 대거 삭제 및 수정된 채 통과되었습니다. 절반의 성공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온 힘을 기울인 만큼 가능했던 조례 통과이기도 합니다. 이후 추진과정에서 공과 실을 모두 소중히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3. 방사능안전급식의 추진 현황

구분	내용	문제점
경기도	<p>조례안 첫 Star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천시 한혜경 의원 “안전한 급식 위해 방사능 측정장비 구입해야” -경기도 녹색당 방사능급식 안전 일인시위 중 -문제개선을 위한 개정요구 움직임 <p>-부천교육청(한혜경의원(정의당), 방사능정밀측정기 1 대 간이측정기 1 대, 12 월말까지 15 개 학교 수산물재료 방사능검사실시할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기준치명시 -인력/장비/예산 확보의 미비
서울시	<p>-서울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발의(8/29) 발의 à 본회의가결(9/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해물질과 병합 -감시위원회 구성 실패

부산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추진위원회결성(17 단체), 10 월 조 례안 발의	-방사능단독조례가 아닌 유해물질과 병합* -공표 6 개월 후 시행
충북	-교육연대, 방사능오염식품학교급식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4/16)	
강원도	-춘천녹색당에서 시작 -민병희교육감, 학교급식방사능에 안전한 식재료공급 선언! -김익중 교수, 강원도 교육청 방사능식품 강의(9/6) -강원도교육청 시민사회와 함께 TF 팀 구성	
대구경북	-시민사회단체, 방사능 안전 학교급식 조례 제정 촉구(36 개단체연 합, 9/10)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대구경북모임발족(10/9)	
경남	-6 일 창원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일본 원전사고 이후 학부모들의 문 의가 급증, 교육장 업무추진비로 방사능 측정기를 구입해 자체 방 사능 검사를 빠르면 내주부터 실시할 계획. 도교육청은 학교 급식 소에서 국내산 수산물 취급 장려와 원산지 확인절차 강화, 태평양 연근해산 수산물 취급 자제 등을 담은 공문을 학교에 보냄.	
전라북도	-김승환교육감, 안전검증 안 된 급식용 식재료 차단 선언! -광주 방사능급식 조례안 추진,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이 6 일 학교급식의 방사능물질을 체계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골자로 하 는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성물질 검사 및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안)' 제정을 광주시교육감과 광주시의회에 요청할 예정	-광주교육청 조례제정거절
제주도	-친환경급식연대, 제주녹색당, 전교조, 환경운동연합, 참여환경연대 등이 방사능급식대책마련을 추진 중	

<표 1> 현재, 전국의 학교 방사능급식 차단 대응 현황(2013.10.11 기준)

아래는 이 밖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청과 지방의회 동향입니다.

-관악구의회(이동영관악구의원)-어린이집 일본산 수산물 금지 결의안 발의

-강동구청장 -“무상급식비 외에 일반식재료와 친환경식재료의 차액분인 친환경급식비를 추가로 지급하여 우수한 먹거리를 확보하고 교육지원청과 협조, 방사능측정기를 보급하는 등 학교급식 질 향상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서대문구청장-서대문구급식에 일본산수산물이 오르지 않도록 영양사 교육 등에 힘쓰겠다(서대문 구 방사능급식 토론회발언4/30)

표 1 <2011~2013 전국 학교급식 일본산 수산물 사용량 현황>

(단위 : kg, 교)

지역	2011						2012						2013						합계						총계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사용량	학교수	사용량	학교수	사용량	학교수	사용량	학교수	사용량	학교수	사용량	학교수	사용량	학교수	사용량	학교수	사용량	학교수	사용량	학교수	사용량	학교수	사용량	학교수		
서울	122	31	102	27	79	21	45	19	100	30	183	29	16	11	53	19	105	25	193	60	256	86	367	75	606	221
부산	60	5	186	8	82	2	14	4	77	4	10	2	0	0	0	0	1	1	74	9	263	12	93	5	430	26
대구	0	0	24	1	12	1	0	0	0	0	0	0	0	0	0	0	0	0	0	24	1	12	1	36	2	
인천	7	7	8	7	3	3	2	3	6	8	4	3	2	1	7	8	1	1	11	11	21	23	8	7	40	41
광주	184	8	33	2	35	3	121	8	0	0	23	3	7	3	0	0	14	3	312	20	33	2	72	9	417	31
대전	6	1	0	0	0	0	6	2	5	1	480	3	25	1	4	2	16	3	37	4	9	3	436	6	542	13
충청	43	2	134	4	1	1	1	1	5	2	4	2	1	1	0	1	2	2	45	4	139	7	7	5	191	16
세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경기	3	1	13	5	20	8	5	3	26	6	13	6	9	5	20	8	15	6	17	9	59	19	48	20	124	48

4. 서울시 조례의 향후 보완 과제

<장기적 대응방안>

- 1) 실효성있는 조례안이 되기 위해서는 현 조례안을 뒷받침해줄 체계적인 시스템 필요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에 의하면 통과된 조례안은 서울시와 협력을 요하는 점이 많아 이것을 수반할 별도의 서울시장의 책무에 관한 조례가 필요합니다. 이 조례를 발의한 김형태 교육의원은 곧이어 서울시장의 학교방사능급식에 장비, 인력 등을 협조할 수 있는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2) 교육의원,교육청 관계자를 방사능식품 위험성 인지시킬 교육 필요

이번 서울시 조례안 추진과정에서 교육의원 및 교육청 관련자들의 방사능식품의 위험성 인식 수준이 현저히 낮고 대수롭지 않게 간과하는 사례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교육청관련자는 아이 학교급식보다 수산물업계를 더 염려하는 말을 하는 등, 아이들의 입에 방사능이 들어가는 일이 결코 시급한 과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김익중 교수를 초빙, 방사능식품안전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 번의 교육으로 새롭게 인식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꾸준한 방사능식품 위험성 인지 교육을 통해 현 상황이 급박하고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부분을 제대로 인식시켜 안전관리체계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3) 아이들만의 독자적 기준치를 만들어 급식에 적용 < 기준치 강화 공론화>

방사능은 세포분열이 왕성한 아이들에게 매우 민감하고, 미량이라도 섭취 시, DNA를 파괴하고 유전변이를 시키는 등 암을 비롯해 각종 질병의 발병률을 높이는 바, 아이들 급식에 독자적인 기준치강화가 필요합니다. 독일방호방사선협회가 권고하는 영유아 4Bq/KG, 청소년과 성인 8

bq/KG 를 적용시켜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생활협동조합인 한살림, 민우회 등은 영유아 4bq/KG, 청소년과 성인 8 bq/KG 를 적용시켜 독자기준치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단기적 대응방안>

1) 방사능장비를 우선적으로 구입할 여건을 만들어야

최소 방사능정밀기계를 구입하는데 시간 소요는 4-6 개월 정도 됩니다. 또한 전문적 인력 교육, 배치 등이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어디서든 장비구입을 시급하게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2) 조례안의 부실한 부분을 보완할 재개정을 요구

조례안의 핵심인 학부모,시민 주체의 감시위원회의 삭제는 현재 급식위원회가 있다는 이유로 통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급식위원회는 연초1회 정도 열리는 등, 변수가 많은 방사능오염에 대처 하기에는 무리가 큼니다.

3) 교육청 TF 팀을 구성

방사능은 전문 지식을 요합니다. 현 조례안에는 학교급식위원회에 전문가 1 명을 위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모니터링, 관리, 대응에 있어서 도저히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든 규정입니다. 방사능에 대한 지식과 의지가 전무한 교육청관련자들에게 방사능대책 마련은 요원한 일입니다. 따라서 시민, 학부모,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서 보다 더 방사능급식 안전을 기할 수 있는 모임을 구성해야 합니다.

4) 중앙정부 외에도 지자체 (구청) 등이 조례를 만들어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방사능급식에 독자적 관리방안을 모색해야

<참고자료 1> 일본 실제 급식 검사를 하고 있는 사례

***일본 실제 급식 검사를 하고 있는 사례 -지자체가 각 독자기준치를 가지고 대응하는 방법**

◆ 학교 급식을 방사능 측정하는 지자체 목록

2011.12.16 아이들의 내부 피폭을 걱정하는 어머니들의 소리를 듣고, 학교 급식의 방사능 측정을 직접 수행 지자체가 속출하고 있다. 측정기의 성능과 측정방법 대상 재료, 검출 한계 등은 지자체에 따라 각각 다르다. 또한 나가노현 마쓰모토시와 이바라키현 조소시와 같이 국가의잠정기준치 500Bq/kg 보다 낮은 자체 기준치를 마련하는 지자체도 나왔다.

◆ 풍문 피해는 측정 결과를 공표하여야 억제

도쿄 대학·하야노 교수는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공간 선량이 높은 지역 일수록, 급식에 의한 내부 피폭 엄격하게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후쿠시마가 가와구치시와 동일 벨로루시제 측정기를 도입, 11 월 1 일부터 측정을 시작했지만, 수도권에 비해 후쿠시마현내 지자체의 움직임은 둔하다. 예를 들어 후쿠시마현 다테시는 "국가와 현의 적절한 관리하에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을 급식에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독자 검사에 대해 신중하다. 시장도 "풍문 피해로 고통받는 생산자에 대한 생각도 공유하고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반대"라고 하야노교수는 말한다. "측정한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풍문 피해도 억제된다. 그것으로 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효과적인 내부 피폭 대책에도 이어질 것입니다."

◆ 급식의 방사능 측정을 실시 지자체의 예

- 후쿠시마 (후쿠시마현)

벨라루스제의 방사능 측정기 4 대를 도입했다. 초 중학교 및 특별 지원 학교 총 73 개교 재료 3 ~ 6 품을 측정. 급식 센터는 주 1 회 단독 급식 실시 학교는 월 2 회 정도.

- 카와 구치시(사이타마현)

후쿠시마와 같은 측정기 (130 만원)를 3 대구입. 전 초중학교 71 교를 대상으로 사용량이 많은 재료 3-6 품목을 학교 급식 센터에서 전달 검사. 검출 한계치는 20Bq/kg.

- 쓰쿠바(이바라키현)

두 학교 급식 센터에서 매일 사용 재료 2 ~ 3 품목을 전달 측정. 공립 보육분도 측정. 히타치 아로카 메디칼제 측정 시스템을 도입. 검출 한계치는 30Bq/kg.

- 쿠리하라시(미야기현)

사용 재료와 조리 후 급식을 감마선 분광계로 측정. 검출 한계치는 10Bq/kg. 결과는 2 주마다 공표. 또한 대수를 늘려 시민을 위한 출장 측정 계획.

- 조소시 (이바라키현)

초등학교 19 교와 시립,사립 보육 시설 11 개소가 대상. 히타치 아로카메디칼제 측정 시스템을 도입하여 매일 1 품을 측정. 검출 한계치 30Bq/kg 를 초과시 자체 규제치로.

- 요코하마(카나가와현)

초등학교 1 개교를 대상으로 사용하려는 모든 재료를 매일 전날 검사. 우유,빵,쌀 요코하마 위생 연구소, 그 이외는 2 개의 검사 기관에 위탁. 검출 한계치는 3Bq/kg.

- 요코스카 (카나가와현)

초등학교 아동에게 제공하는 식사 1 인분을 1 주일(5 일분)마다 검사기관에 사후 측정. 월 1 회, 3 품 목씩 사전 샘플링 측정도 실시 중. 검출 한계치는 1Bq/kg 전후.

참고: <http://nikkan-spa.jp/107479>

도쿄도 코마에시의 모든 시립 중학교의 급식이 4월부터 중지되는 것이 15일, 알려졌다. 시 교육 위원회와 계약하고 있던 민간업자가 2013년도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4월까지 대체업자를 찾지 못해 중단 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매우 드문 케이스라고 한다.

급식이 중지되는 것은 시립의 네 중학교. 학생과 교직원 합계 약 1500 명의 70%가 먹고있다. 코 마에시의 초등학교는 학교에서 조리하고 있지만, 중학교는, 시 교육위원회의 영양사가 식단을 생각해, 민간회사인 「미타카 급식센터」(미타카시)가 조리해, 각 학교에 보내고 있다.

동 센터의 마츠야마 켄지 사장이, 시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고 전한 것은 2월 27일. 시의 담당자는 「너무 갑작스러운 일로 대응할 수 없다. 적어도 반년 전에 말했다면 좋았다」라고 머리를 싸쥐고 고민한다. 학교 급식은 요리를 시작해서 2시간 이내에 배식하도록, 학교 급식법에 의한 기준으로 정해져 있다. 시내나 주변에서는 조건에 맞는 업자가 없고, 새롭게 다른 업자를 찾기가 어렵다고 한다.

<http://www.asahi.com/national/update/0315/TKY201303150456.html>

◆ 피폭의 대부분은 음식을 통한 내부 피폭(80~95%)이었다.

외부피폭은 5~20%에 불과(2006년 우크라이나 정부 발표)

1986년 체르노빌 핵발전소사고이후 가장 피해가 많았던 것은 먹어서 피폭되는 일입니다. 그 피해는 27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며 그 당시의 많은 어린이들이 가장 피해를 입었으며 아직도 그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건강한 어린이는 6%",식품섭취로 내부피폭

만성질환이 있는 어린이가 20%에서 78%로 급증했다고 한다(닛칸 젠다이 2012. 11. 8)

-내부 피폭에서는 감마선이 나오는 세슘보다 베타선이 나오는 (핵종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스트론튬의실질적인영향은세슘보다 30배나 크다.

◆ 내부피폭과 외부피폭의 차이는 300~900 배나 되기도 할 정도로 위험합니다. 핵종에 따라, 내부 피폭은 동일 복용량의 외부 피폭에 비해 300 ~ 1000 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스트론튬 90 은 1mSv 의 내부 피폭을 하면 그 영향은 300mSv 의 외부 피폭에 해당합니다. (크리스 버즈비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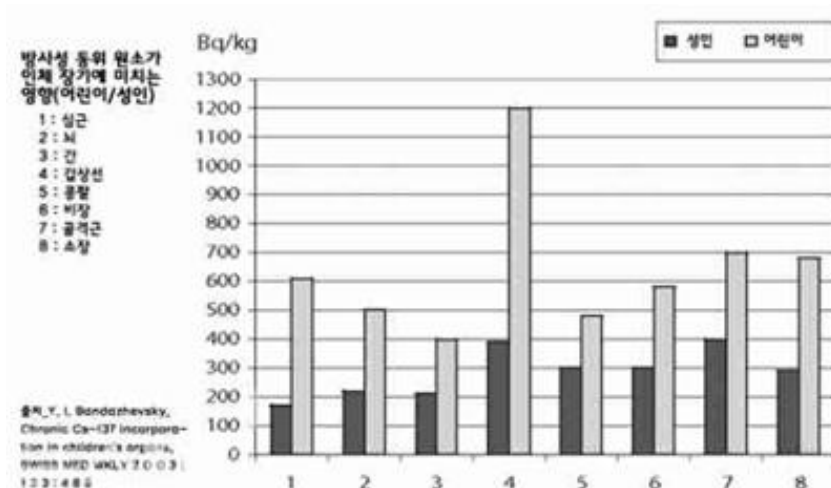
◆ "ICRP(국제 방사선 방호위원회)의 내부 피폭에 대한 위험 모델 틀리다"고 인정했습니다. ICRP의 최고 책임자의 한 사람인 잭 발렌티 인 박사를(2009년 4월) ICRP의 위험 모델을 쓴 장 본인- 내부 피폭에 대해 "최대 900 배의 오류 (과소 평가)가있다"고 증언함

◆ ECRR (유럽 방사선 리스크위원회 - Wikipedia)는 ICRR 내부 피폭의 평가는 최소한 "60 배"에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인체에 들어간 방사성 세슘의 의학적 생물학적 영향-체르노빌의 교훈, 세슘 137 에 의한 내장의 병으로 일어나는 변화와 대책

-조금이라도 장기에 흡입되면 질환이 악화될 위험이 매우 높아진다"(벨라루스 ·고멜 의대 유리 반다제프스키 전 학장)

음식 중의 세슘 섭취에 의한 내부 방사능 노출(피폭)의 연구가 거의 없는 가운데, 반다제프스키 박사는, 대학병원에서 사망한 환자를 해부해, 심장, 신장, 간장 등에 축적된 세슘 137의 양과 장기 세포조직의 변화와 환경을 조사해 체내의 세슘 137에 의한 방사능 노출은 저선량에서도 위험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참고자료 2> 서울특별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서울특별시교육청 <u>방사능으로부터</u>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u>방사성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들의</u>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방사성물질”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물질로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루토늄을 포함한다.</p> <p>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을 말한다.</p> <p>제3조(교육감의 책무) <u>교육감은 학교급식에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u> 검사를 실시하고,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p> <p>제4조(<u>방사성물질 검사 체계</u>)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u>식재료를 정기 및 수시로 검사하여야 하되, 학교별로 연 2회 이상 사전 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u> 검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p> <p>② 학교급식과 관련되어 설치된 센터 또는 학교는 전항의 검사에 협력하여야 한다.</p> <p>③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교육감은 서울특별시장과 협력하여 전항의 인력과 장비를 공동으로 마련하거</p>	<p>서울특별시교육청 <u>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u>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u>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들어가지 않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u>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농약, 중금속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p> <p>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을 말한다.</p> <p>제3조(교육감의 책무) <u>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u> 검사를 실시하고,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p> <p>제4조(<u>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u>)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u>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학교별로 연 1회 이상 전수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u>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③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p>

원 안	수 정 안
<p>나 활용할 수 있다.</p> <p>제5조(학교급식 방사성물질 감시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방사성 검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학교급식 방사성물질 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은 학교급식이나 먹거리안전, 방사성물질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그 중 3분의1 이상은 학부모 중에서 공모하여 위촉하고, 3분의1은 서울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p> <p>④ 위원회의 간사는 학교 급식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되,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공동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p> <p>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p> <p>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사의 검사체계, 품목, 방식, 시기 등이 포함된 연간 방사성물질 검사계획 2.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등을 감안한 방사성물질 검출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의 지정 3. 학부모, 영양(교)사, 조리사 등 급식 관계자에 대한 교육계획 4.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 및 연구방안 5. 그밖에 교육감이나 위원장, 위원 5명 이상이 본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제안한 사항 	<p>제5조(정책수립) ① 교육감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교육감은 제1항의 정책수립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 위원회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전문가 1인 이상을 위촉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원 안	수 정 안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분기별로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전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교급식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삭제>
제8조(위원회의 자료조사) 위원회는 안전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을 방문하여 수집할 수 있다.	<삭제>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삭제>
제10조(방사성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교육감은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위원회와 해당학교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6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교육감은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학교에 통보하여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교육청 홈페이지에 그 검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 교육감은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를 유효자리 한자리까지 표시하여 교육청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해야 한다.	<삭제>
제12조(방사성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에 대한 조치) ① 학교의 장은 방사	제7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에 대한 조치) ① 학교의 장

원 안	수 정 안
<p><u>성물질</u> 검출 가능성이 높은 <u>식재료</u>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p> <p>② 교육감은 <u>위원회의</u> 심의를 거쳐 <u>방사성물질 검출가능성이 높은 식재료를 고시</u>할 수 있다.</p> <p><u>제13조(업무협조)</u> 교육감은 <u>본</u> 조례의 <u>시행을 위해</u> 필요한 사항에 <u>대해</u> 외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u>제14조(영양교사와 영양사 및 조리사 교육)</u> 교육감은 영양교사와 영양사 및 조리사의 교육 및 연수에 <u>방사성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의</u> 내용을 <u>반드시 포함하여야</u> 한다.</p> <p><u>제15조(시행규칙)</u>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u>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u> 시행한다.</p>	<p>은 <u>방사능 등 유해물질</u> 검출 가능성이 높은 <u>식재료에 대하여</u>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p> <p>② 교육감은 <u>학교급식위원회의</u> 심의를 거쳐 <u>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의 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u></p> <p><u>제8조(업무협조)</u> 교육감은 <u>이</u> 조례의 <u>시행에</u> 필요한 사항에 <u>대하여</u> 외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u>제9조(교육 및 연수)</u> 교육감은 영양교사와 영양사 및 조리사의 교육 및 연수에 <u>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u> 내용을 <u>포함하여야</u> 한다.</p> <p><u>제10조(시행규칙)</u>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u>시행한다.</u></p>

기조발제2

방사능 안전급식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별 현황과 정책과제

하승수 |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방사능 안전급식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별 정책현황과 과제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1. 후쿠시마와 방사능 위험

지난 1월21일 영국 언론 <데일리메일>은 충격적인 보도를 했다. 도쿄전력이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은 생선의 방사능 수치를 측정했는데, 그중 ‘개불락’에서 기준치의 2540배에 달하는 세슘이 검출됐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정한 기준치가 1kg당 100벵크렐(Bq) 이하인데, 1kg당 무려 25만4천Bq이 검출된 것이었다. 이 수치는 2012년 8월에 잡힌 생선에서 검출된 세슘 수치보다 10배나 증가한 것이기도 하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바다로 흘러들어간 엄청난 양의 방사성 물질이 생선의 몸속에 축적되고 있는 것이다.

생선만이 문제가 아니다. 후쿠시마 부근에 서식하는 멧돼지의 체내 방사능 수치를 측정한 결과, 7마리 중 6마리에서 기준치를 훨씬 넘는 방사성물질이 나왔다. 후쿠시마 부근에서 생산되는 쌀이나 각종 채소에서도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접하니 우리가 먹는 먹거리는 괜찮은지 걱정이 된다. 과연 괜찮을까?

우선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후쿠시마 사고 직후부터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서 세슘이 검출되기 시작했다. 세슘137은 반감기가 30년으로 몸에 흡수되면 근육 등에 축적돼 암이나 유전장해를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일단 몸속에 들어오면 배설될 때까지 100~200일 정도가 걸리며, 그 사이에 몸이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농림수산검역본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만 일본에서 수입된 냉장 명태에서 34회, 냉동 고등어에서 37회, 냉동 대구에서 9회나 세슘이 검출됐다. 문제는 이렇게 세슘이 검출돼도 수산물은 수입이 된다는 데 있었다. 정부가 정한 허용 기준치 이하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세슘이 든 생선은 통관이 되어 누군가의 입속으로 들어갔다. 신기한 건 막상 시장에 가면 일본산 생선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수입된 ‘세슘 생선’들은 누가 먹었을까? 유통 경로가 불투명해서 알 길이 없지만, 분명한 건 이 땅에 사는 누군가가 먹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불안은 더 커진다.

원산지표시도 믿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지금 유통되는 수산물 중에서 원산지표시위반 건수가

때 적발되고 있다. 연합뉴스 8월 18일자 기사에 따르면, 2011년에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일본산 수산물 129건이 적발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2013년 상반기에도 37건이 적발되었다고 한다.

지난 6월 26일 방송된 MBC <불만제로>에서도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불투명한 유통경로에 대해 자세하게 보도를 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국내산으로 알고 먹는 고등어 중에 일본에서 수입된 냉동고등어가 많다는 것이다. 우리가 먹는 생태의 90% 이상은 일본에서 수입된 것이다. 이런 일본산 수산물들이 일단 수입이 된 다음에 국산이나 러시아산으로 둔갑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이것이 ‘일본산’인지도 모르고 먹고 있다는 것이다.

방사성물질이 들어간 먹거리를 먹으면 ‘내부 피폭’이 된다. 공기를 통해 방사선에 노출되는 ‘외부 피폭’보다 ‘내부 피폭’이 훨씬 더 위험하다. 1986년 러시아 체르노빌 원전 사고 때도 임신한 여성의 배속에 있던 태어나 어린이들이 방사성물질이 들어간 식품 때문에 내부 피폭을 당했다. 그 결과 기형아 출산, 소아암 발생 등 끔찍한 일들을 겪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은 내부 피폭을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방사성물질의 편에 선 것 같다. 언론이나 환경단체가 문제를 제기하면, ‘허용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해 왔다. 그래서 그동안 ‘세습 생산’을 수입해 왔다. 최근 뒤늦게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을 수입금지하고, 나머지 지역의 일본산 수산물에서도 세습이 검출되면 ‘비오염 증명서’를 요구해 반송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너무 늦은 조치이다. 그리고 현재의 표본검사 방식으로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성을 보장하기는 어렵다.

2 확산되는 방사능의 위험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서만 방사성물질이 검출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외국에서 수입되는 식품들이나 국내산 식품이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다. 2012년에는 일부 국내산 버섯류에서 낮은 수치지만 세습이 검출돼서 충격을 주기도 했다.

사실 후쿠시마 사고 이전에도 땅과 바다는 이미 방사성물질에 어느 정도 오염돼 있었다. 강대국들이 자행한 핵실험, 체르노빌 원전 사고 등에서 나온 방사성물질이 어디로 갔을까? 지구상 어느 곳에 떨어져 흩과 물 속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안전지대가 아닌 것은 당연하다. 다만 후쿠시마 사고 이전에는 그 사실을 몰랐을 뿐이다. 후쿠시마 사고를 겪으며 관심을 가지고 방사능 검사를 해보니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생활협동조합들에는 비상이 걸렸다. 평소에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강조해온 만큼, 내부 논의를 통해 정부 기준치와는 별도로 생협 자체 기준치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것을 통해 더욱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환경단체와 함께 방사능 핵종분석기를 구입해서 독자적인 시민방사능감시센터를 설립하기도 했다. 혹시라도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물질이 검출돼 생산자가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생산자보호기금도 만드는 생협도 있다.

그런데 정부는 손을 놓고 있었다. 국내의 전반적인 방사능 관리체계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먹는 물에 관해서는 기준치 자체가 없다. 우리나라는 요오드와 세슘¹³⁴, 세슘¹³⁷에 대해서만 기준치를 두고 있고, 그 외의 방사성물질에 대해서는 기준치를 두고 있지 않다.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서도 세슘 이외에 플루토늄·스트론튬 등의 방사성물질이 유출됐는데, 우리나라는 기준치조차 없는 것이다.

그나마 정해져 있는 기준치도 너무 높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나라 정부가 정한 기준치는 요오드의 경우에는 kg당 100Bq(우유와 영·유아용 식품) 또는 300Bq(그 밖의 식품)이다. 세슘은 kg당 370Bq을 기준치로 잡고 있다. 다만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만 2012년부터 세슘 기준치를 kg당 100Bq로 운용하고 있었다. 이것도 우리나라 정부가 노력했다기보다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일본 정부가 자체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것이었다. 최근에 세슘 기준치를 일본처럼 kg당 100Bq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지만, 그것도 너무 높은 기준치이다.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호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등에 대하여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고시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식품의 방사능 물질 잔류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I 권]

제 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5.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7) 방사능 기준

핵 종	대 상 식 품	기준(Bq/kg, L)
¹³¹ I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영·유아용특수조제식품	100
	유 및 유가공품	100
	기타 식품★	300
¹³⁴ Cs + ¹³⁷ Cs	모든식품	3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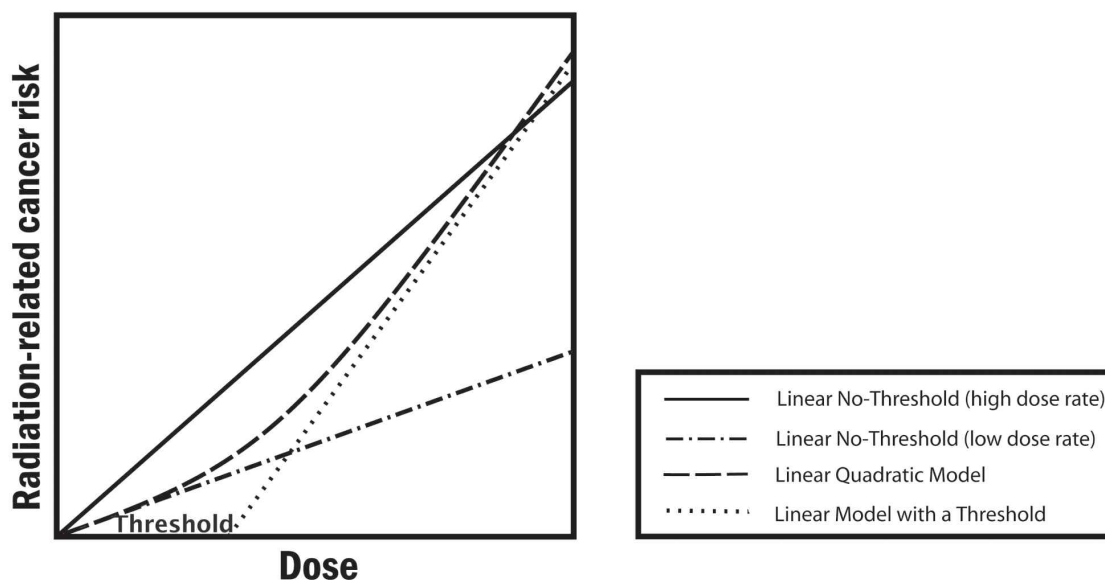
★ 기타식품은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영·유아용특수조제식품, 유 및 유가공품을 제외한 모든 식품을 말한다.

참고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바 있는 IPPNW(핵전쟁방지를 위한 의사회)는 성인의 경우에 8 Bq/Kg, 어린이에게는 4 Bq/Kg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의 방사선방호위원회가 이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인 바 있다.

1베크렐(Bq)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베크렐은 방사성물질이 방사선을 방출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단위이다. 1베크렐은 방사성 물질의 원자핵이 1초당 1번 붕괴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1베크렐의 세슘이 들어간 식품을 먹으면 1초당 1번 내 몸에서 붕괴가 일어나 방사선이 방출되는 것이다. 내부피폭이 되는 것이다.

방사선은 그 양이 적은 ‘저선량 방사선’이라고 하더라도 위험하다는 것이 의학계의 정설이다. 김익중(동국대 의대) 교수 등이 번역한 미국과학아카데미(National Academy of Sciences)의 논문이 공개되어 있다. “저선량방사선의 건강위험에 관한 보고서(Health Risks from Exposure to Low Levels of Ionizing Radiation)”라는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하면, 저선량피폭도 암발생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영.유아에게 위험하다는 것이다.



위 그래프에서 x축은 피폭량을 의미하고 y축은 암발생 위험도를 의미한다. 그런데 미국과학아카데미는 이 중에서 선형무역치모델(Linear No-Threshold)을 선택하고 있다. 한마디로 “방사능은 피폭량에 비례하여 암을 발생시키며, 이는 기준치 이하라도 마찬가지이다.”라고 결론 맺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허용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차라리 위험하다는 걸 인정하

고, 시민들을 방사성물질에서 안전하게 보호할 방법을 찾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최소한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들이 먹는 급식이라도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3. 방사능 안전 급식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현황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다. 그런데 이런 책임마저 방기하는 정부 때문에 시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 우선은 시민들에게 방사능과 관련된 정보가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돼야 한다. 그리고 방사능에 취약한 유아나 어린이, 청소년들이 집단 급식 등을 통해 내부 피폭을 당하지 않도록 엄격한 검사와 관리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중앙 정부가 안 하면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이라도 하게 해야 한다. 막연하게 '기준치이하면 안전하다'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기준치이하라도 피폭이 되면 건강에 위협이 되고, 특히 태어나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들은 방사선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녹색당이 17개 광역시·도 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다. 그 결과를 보면, 시범사업으로라도 식품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곳은 경기, 서울, 충청북도 교육청 3곳에 불과했다.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추고 방사능검사를 하고 있는 곳은 없었다. 대부분의 교육청들은 식품방사능 검사에 대한 계획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손놓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자체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검사를 하고 있는 곳은 적었다. 대전광역시처럼 아예 식품방사능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는 곳도 9군데나 되었다. 강원도와 충청남도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여년 가까이 된 방사능측정기를 갖고 있어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는 <첨부자료4>를 봐 주길 바란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례제정운동이 시작되었다. 녹색당은 일단 학교급식에 대해서부터 <첨부자료2>와 같은 모범조례안(서울시 조례 논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된 부분 반영)을 발표했다.

녹색당이 발표한 모범조례의 내용은 * 방사성물질 검사에 관한 체계를 갖추고,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는 것 * 최소한의 검사주기(연2회 이상)를 명시하는 것 * 방사성물질 검사체계, 품목, 주기, 방식 등을 포함하는 방사성물질검사계획 등을 심의·의결할 감시기구를 갖추는 것. 그리고 이 기구에 학부모 등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 * 방사성물질이 검출될 경우에는 식재료 사용을 제한하는 것 * 학교별로 존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방사능 검출가능성이 높은 식재료를 학교급식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조례 제정이 법률적으로 가능한가? 에 대해 약간의 논란은 있었다. 특히 방사능이 국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될 경우에도 식재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느냐? 가 쟁점이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정한 기준치 이하의 방사성물질이 검출될 경우에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정부가 정한 기준치는 연령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정한 것이고, 또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그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교육청이 관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조례가 제정된 현황을 보면,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조례가 제정되었다. 경기도에서 제정된 조례의 명칭은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이다. 그러나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조례 제정의 의미가 없다. 정부가 정한 기준치 이상일 경우에 사용 제한을 한다는 정도이기 때문이다. 측정방식도 휴대용방사능측정기로 간이검사를 하는 수준이다. 그래서 경기도 조례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에서 통과된 조례는 명칭이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되었다. 녹색당의 모범조례안을 기초로 논의를 했지만, 학부모가 참여하는 ‘방사성물질 감시위원회’ 부분이 삭제되는 등 내용이 상당부분 후퇴되었다. 감시위원회가 구성되어야만 이 조례가 힘있게 추진될 수 있는데, 그것이 이뤄지지 못한 점이 아쉽다. 또한 방사성 물질 검사결과를 유효자리 한자리까지 표시하도록 한 부분이 삭제된 것, 검사횟수를 ‘연2회 이상 의무화’에서 ‘1회 이상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수준으로 바꾼 것도 미흡한 부분이다.

그러나 서울시 조례의 내용을 보면, 한발 나아간 부분도 있다. 중앙정부가 정한 기준치와 무관하게, 방사성물질이 일단 검출되기만 하면 사용제한을 하도록 했다는 점이 그것이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조례 시행과정도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조례 심의과정에서 휴대용 방사능측정기 정도로 측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휴대용 방사능측정기로는 제대로 된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례의 실행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압력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다른 지역에서도 학교급식을 방사능 위협으로부터 지켜나가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강원도 교육감은 최근 학교급식에서 방사능검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시민사회와 함께 조례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대구, 경북, 광주, 부산, 전북, 대전 등의 지역에서도 지역의 시민,환경단체, 생협들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4. 향후의 과제

먼저 전제해야 할 것은 한국의 경우에는 교육자치와 일반지방자치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유치원 포함)급식의 안전관리는 교육청의 소관이고, 어린이집 급식의 안전관리는 기

초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정이나 인력을 갖추기 용이한 곳은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이기도 하다. 그래서 시.도의 협력도 중요하다.

정리하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역할구분이 필요하다.

구분	학교급식	어린이집급식
책임주체	교육청(교육감)	시.군.구청(시장.군수.구청장)
협력주체	시.도지사	시.도지사

1> 학교급식 부분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서울의 경우에는 제정된 조례가 제대로 집행되게 하는 것부터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례를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정리하여 다시 개정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조례가 실효성있게 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교육청 조례가 아니라, 일반 지방자치(시.도) 조례에서도 방사능에 관한 조항을 넣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친환경무상급식을 하면서 시.도청이 교육청에게 급식비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급식비 지원을 하는 식재료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해야 한다는 것을 조례에 명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일반 지방자치의 친환경무상급식 관련 조례에서 방사능에 관한 조항을 넣는 것은 교육청이 좀더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6호에는 “식재료”에 관한 정의조항이 있다. 이것을 개정해서 식재료는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해야 한다는 것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급식비 지원을 하는 식재료에 대해서는 정기적 검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조례에 담을 수 있을 것이다.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현행	수정
제2조 제6호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고 「식품위생법」의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고, <u>방사성물질이 검출되지 않으며</u> , 「식품위생법」의 기

기준에 따른 안전한 농·수·축산물과 그 원료로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이력추적이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기준에 따른 안전한 농·수·축산물과 그 원료로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이력추적이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추가)	제11조의2(방사성 물질 검사) 시장 및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해 지원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성물질 검사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친환경무상급식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 관련 조례에도 비슷한 내용을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서울 서대문구의 경우에도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서울시와 유사한 방식으로 조례에 방사성물질 관리에 관한 조항을 넣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현행	수정
제2조 제5호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고 「 식품위생법 」에 따른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제5호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고, <u>방사성물질이 검출되지 않으며, 「식품위생법」에 따른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게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u>
(추가)	<u>제12조의2(방사성 물질 검사) 구청장은 지역 교육청 및 학교 등과 협력하여 이 조례에 의해 지원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성물질 검사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u>

2> 어린이집 급식

초등학교에 취학하기 전의 영유아의 경우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집단급식을 먹게 된다. 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를 통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서울시 교육청 조례의 경우에도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을 조례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문제는 어린이집이다.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법’이라는 별도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보육정책은 지방교육자치가 아니라 일반지방자치의 영역에 속한다. 그래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에 대한 직접적인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도 예산지원, 정책수립, 감독 등의 권한이 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이뤄지는 집단급식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관리 자체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녹색당이 공동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에서 마포구와 서대문구, 종로구 3곳만이 어린이집 급식에 제공되는 수산물 식재료의 원산지 정보를 확보하고 있었다. 나머지 구청은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의 원산지 확인과 관련한 어떠한 자료도 구비하고 있지 않았다. 방사능 검사는커녕 원산지 관리 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어린이집이 급식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서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물론 어린이집 별로는 원산지와 관련된 정보가 있을 수 있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과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르면 1회에 50명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서는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¹⁾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 관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25개 서울시 자치구 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 현황(정보공개청구 결과)>

지역	수산물 납품(원산지 등)과 관련한 답변 내용	지역	수산물 납품(원산지 등)과 관련한 답변 내용
강남구	정보 부존재	서대문구	공개함.
강동구	정보 부존재	서초구	정보 부존재
강서구	정보 부존재	성동구	정보 부존재
관악구	정보 부존재	성북구	정보 부존재
광진구	정보 부존재	송파구	정보 부존재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원산지표시)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같은 법 시행령 4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영업소나 제2조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구로구	정보 부존재	양천구	정보 부존재
금천구	정보 부존재	영등포구	정보 부존재
노원구	※ ‘국내산 위주’라는 통일된 답변	용산구	정보 부존재
도봉구	정보 부존재	은평구	정보 부존재
동대문구	정보 부존재	종로구	공개함.
동작구	정보 부존재	중구	정보 부존재
마포구	공개함.	중랑구	정보 부존재

서울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상황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래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의 조례를 통해 영·유아들에게 제공되는 어린이집 급식을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행 ‘영·유아 보육법’상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할 의무가 있다(제33조).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고(제41조),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는(제42조) 등의 지도감독권한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급식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존재한다.

또한 조례에 의해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을 어린이집까지 확대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급식비 지원을 하므로 어린이집 급식을 감독할 또 하나의 근거가 추가된다.

어린이집 급식에 관한 조례(안)은 첨부자료3으로 붙인다.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와 유사하되, 책임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과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점이 차이가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조례(안)을 만들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검사 장비와 인력을 확보해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검사를 수행하고 관리를 해 나가는 것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린이집 급식의 경우에는 방사능 뿐만 아니라 다른 유해물질까지 포함해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전반적인 급식 안전관리의 문제로 접근해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첨부자료1> 00시.도 교육청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 녹색당 발표 모범조례

1. 제안이유

-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일본산 수입수산물에서 세슘이 검출되고 있음. 또한 수입산 또는 국내산 식품에 대해서도 방사성물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그러나 국내의 방사성물질 관리체계는 매우 허술함. 그에 따라 방사능에 취약한 어린이·청소년이 자신도 모르게 방사능물질이 들어간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내부피폭을 당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음.
- 이에 학교급식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해서는 방사성물질 검사를 하고,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식재료는 급식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방사성물질이 검출될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함(제3조).
- 나.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정기 및 수시로 검사하여 연2회이상 검사가 되도록 하며, 학교급식과 관련되어 설치된 센터 또는 학교는 전항의 검사에 협력하여야 함. 검사를 위해 시.도지사와 협력할 수 있음(제4조).
- 다. 방사성 검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00시.도 학교급식 방사성물질 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함. 위원회는 공모절차를 거친 학부모 3분의1 이상, 그리고 의회 추천 3분의1를 포함하여야 함(제5조).
- 라. 위원회는 1)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사의 검사체계, 품목, 방식, 시기 등이 포함된 연간 방사성물질 검사계획 2)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등을 감안한 방사성물질 검출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의 지정 3) 학부모, 영양(교)사, 조리사, 학생 등에 대한 교육계획 4)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 및 연구방안 등을 심의.의결함(제6조).
- 마. 교육감은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위원회와 해당학교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함(제10조).

바. 교육감은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를 유효자리 한자리까지 표시하여야 하며, 이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함(제11조).

사. 학교의 장은 방사성물질 검출가능성이 높은 식재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사용하지 않을 수 있고,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사성물질 검출가능성이 높은 식재료 목록을 제공할 수 있음(제12조).

아. 교육감은 영양교사와 영양사 및 조리사의 교육 및 연수에 방사성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제14조).

조례 조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00시.도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방사성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사성물질”이란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검사를 실시하고, 방사성물질이 검출될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4조(방사성물질 검사 체계)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정기 및 수시로 검사하여야 하되, 학교별로 연 2회 이상 사전 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검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여러 학교에 공동으로 공급되는 식재료의 경우에는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학교급식과 관련되어 설치된 센터 또는 학교는 전항의 검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교육감은 00시장(또는 00도지사)와 협력하여 전항의 인력과 장비를 공동으로 마련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제5조(학교급식 방사성물질 감시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방사성 물질 검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00시.도 학교급식 방사성물질 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교급식이나 먹거리안전, 방사성물질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그 중 3분의1 이상은 학부모 중에서 공모하여 위촉하고, 3분의1은 서울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학교 급식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되,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공동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1.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사의 검사체계, 품목, 방식, 시기 등이 포함된 연간 방사성물질 검사계획
2.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등을 감안한 방사성물질 검출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의 지정
3. 학부모, 영양(교)사, 조리사, 학생 등에 대한 교육계획
4.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 및 연구방안
5. 그밖에 교육감이나 위원장, 위원 5명 이상이 본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제안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분기별로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교급식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자료조사)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교육청이나 학교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을 방문하여 수집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방사성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교육감은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위원회와 해당학교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 교육감은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를 유효자리 한자리까지 표시하여 교육청 홈페이지

페이지에 즉시 공개해야 한다.

제12조(방사성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에 대한 조치) ① 학교의 장은 방사성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사성물질 검출가능성이 높은 식재료 목록을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업무협조) ① 교육감은 본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외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및 그 산하기관 등은 본 조례의 시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영양교사와 영양사 및 조리사 교육) 교육감은 영양교사와 영양사 및 조리사의 교육 및 연수에 방사성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첨부자료2> 서울특별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들어가지 않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농약, 중금속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검사를 실시하고,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학교별로 연 1회 이상 전수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정책수립) ① 교육감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정책수립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전문가 1인 이상을 위촉할 수 있다.

제6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교육감은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학교에 통보하여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교육청 홈페이지에 그 검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에 대한 조치) ① 학교의 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의 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협조) 교육감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연수) 교육감은 영양교사와 영양사 및 조리사의 교육 및 연수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자료3> 00시.군.구 어린이집 방사능 안전 급식 관리에 관한 조례

1. 제안이유

-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일본산 수입수산물에서 세슘이 검출되고 있음. 또한 수입산 또는 국내산 식품에 대해서도 방사성물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그러나 국내의 방사성물질 관리체계는 매우 허술함. 그에 따라 방사능에 취약한 영.유아가 방사능물질이 들어간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내부피폭을 당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음.
- 이에 어린이집 급식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해서는 방사성물질 검사를 하고,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식재료는 급식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어린이집 급식의 안전성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에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체계를 갖추고, 방사성물질이 검출될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함(제3조).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정기 및 수시로 연 2회 이상 검사하여야 하며, 어린이집급식과 관련되어 설치된 센터 또는 학교는 전항의 검사에 협력하여야 함. 검사를 위해 시.도지사 및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음(제4조).

다. 방사성 검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00시.군.구 어린이집 급식 방사성물질 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함. 위원회는 공모절차를 거친 학부모 3분의1 이상, 그리고 의회 추천 3분의1를 포함하여야 함(제5조).

라. 위원회는 1)어린이집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사의 검사체계, 품목, 방식, 시기 등이 포함된 연간 방사성물질 검사계획 2)방사성물질 검사결과 등을 감안한 방사성물질 검출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의 지정 3)학부모, 급식 관련 종사자, 원생 등에 대한 교육계획 4)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관리 체계구축을 위한 조사 및 연구방안 등을 심의.의결함(제6조).

리.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위원회와 해당 어린이집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함(제10조).

마. 시장.군수.구청장은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를 유효자리 한자리까지 표시하여야 하며, 이를 지

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함(제11조).

바. 어린이집의 원장은 방사성물질 검출가능성이 높은 식재료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하지 않을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사성물질 검출가능성이 높은 식재료 목록을 제공할 수 있음(제12조).

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식 관련 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에 방사성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제14조).

조례 조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00시·군·구 내에서 실시하는 어린이집급식에 방사성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사성물질”이란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을 말한다.

제3조(시장·군수·구청장의 책무)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급식에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검사를 실시하고, 방사성물질이 검출될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방사성물질 검사 체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정기 및 수시로 검사하여야 하되, 어린이집별로 연 2회 이상 사전 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검사체계를 갖춰야 한다. 다만, 여러 어린이집에 공동으로 공급되는 식재료의 경우에는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급식과 관련되어 설치된 센터 또는 학교는 전항의 검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인근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도지사, 교육감 등과 협력하여 전항의 인력과 장비를 공동으로 마련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어린이집급식 방사성물질 감시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방사성 물질 검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00시·군·구 어린이집급식 방사성물질 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어린이집급식이나 먹거리안전, 방사성물질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되, 그 중 3분의1 이상은 학부모 중에서 공모하여 위촉하고, 3분의1은 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어린이집 급식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되,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공동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1. 어린이집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사의 검사체계, 품목, 방식, 시기 등이 포함된 연간 방사성물질 검사계획
2.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등을 감안한 방사성물질 검출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의 지정
3. 학부모, 급식 관련 종사자, 학생 등에 대한 교육계획
4.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 및 연구방안
5. 그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위원장, 위원중 5분의1 이상이 본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제안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분기별로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급식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자료조사)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시·군·구청이나 어린이집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을 방문하여 수집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방사성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은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위원회와 해당 어린이집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 시장·군수·구청장은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를 유효자리 한자리까지 표시하여 교육청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해야 한다.

제12조(방사성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에 대한 조치) ① 어린이집 원장은 방사성물질 검출가능성이 높은 식재료는 「영유아보육법」 제25조 제1항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사성물질 검출가능성이 높은 식재료 목록을 어린이집에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업무협조) 시장·군수·구청장은 본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외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급식 관련 종사자 교육)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 급식 관련 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에 방사성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첨부자료4>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방사능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과

지역	식품방사능 관련
강원도	노후된 방사능 측정장비 1대(구입일 1995.12.05)를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보유하고 있으며, 부품교체 불가로 사용이 불가능하며, 현재 별도의 전담검사. 인력 지정은 없음.
경기도	타 기관이송(식품의약품안전처)
경상남도	- 검사하고 있음 - 방사능측정기 대수와 검사인력 현황 · 방사성물질 측정기(감마핵종분석기) : 2대(식품 및 환경가검물 검사용 각 1대) · 방사성물질 검사인력 : 2명(식품검사 및 환경가검물 검사인력 각1명)
경상북도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방사능측정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식품방사능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광주광역시	1) 장비보유 : 휴대용 방사능오염도 측정기 1대

	2) 검사인력 : 1명(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검사소) 3) 검사실시 여부 - 검사횟수 : 2회/월 - 검사장소 :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 검사대상 및 건수 : 수산물(어패류 등), 100여건/월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방사능 측정기를 구비하고 있지 않고 식품 방사능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전광역시	방사능 측정기를 구비하고 있지 않음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방사능 측정 장비인 감마핵종분석기를 1대 구비하고 있습니다. 2012년 7월부터 식품에 대한 방사능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 인력은 1명입니다.
서울시	식품안전과 간이검사기 3대 14명 보건환경연구원 1대 1명
세종시	해당사항 없음
울산시	2013. 6월 현재 식품방사능 검사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천광역시	식품방사능측정기 1대, 검사인력 1명
전라남도	해당사항 없음
전라북도	방사능 시험장비 및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식품방사능에 대한 검사 불가 함
제주도	- 방사능측정기 구비여부 : 구비하지 않음 - 식품방사능에 대한 검사 실시여부 : 실시하지 않음 ※ 제주지역 유통식품 방사능 검사관련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실시하고 있음
충청남도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식품 중 방사능 측정장비로 "다중과고분석기 (94년)"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비 노후로 정상가동이 불가능 하며, 현재는 식품 중 방사능 측정 업무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해당사항 없음

○ 광역교육청의 식품방사능 대책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결과

지역	식품방사능 관련
강원도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교육과학기술부)에 의거 학교급식식품에 HACCP 검증에 위한 미생물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방사능검사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	▷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여러기관에서 식재료 유통단계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도차원으로 휴대용 방사능 계측계(5대 보유)를 이용하여, 식품접촉표면 방사선량 측정을 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니다.
경상남도	해당사항 없음
경상북도	식품방사능 검사 실시하고 있지 않음
광주시	미실시
대구시	해당사항 없음
대전시	해당사항 없음
부산시	해당사항 없음
서울시	우리교육청에서는 2012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에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 55건을 의뢰한바 있으며, 검사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세종시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는 식약처,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허가 및 신고를 득한 제품을 사용하는 등 안전성이 확보된 우수 식재료를 구매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표시사항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급식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는 식재료 안전성 검사의 일환으로 쇠고기 유전자 검사 및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울산시	해당사항 없음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에 대해 식품방사능 검사는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다만 수산물 수입과정 중 농림수산물검역본부의 방사능 검사를 통하여 안전한 수산물만이 수입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사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전라남도	우리도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식품방사능 검사는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 않음.
전라북도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식품방사능 검사는 실시하고 있지 않음
제주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식품방사능 검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2012년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구)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제주지역본부)의 협조를 받아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2개교에서 2건을 수거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방사능검출 여부 : 불검출)
충청남도	해당사항 없음
충청북도	우리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평택, 장항지원의 협조로 금년도에 학교급식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검사를 표본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평택지원에서는 고순도 게르마늄 감마선 분광분석기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토론 1

우리 아이들에게 방사능 없는 생명 먹거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핵의 위협이 없는 생명평화 세상을!!

이윤숙 | 한국YWCA연합회 생명비전연구소 부장

우리 아이들에게 방사능 없는 생명 먹거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핵의 위협이 없는 생명평화 세상을!!

이윤숙 (한국YWCA연합회 생명비전연구소 부장)

1.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요구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다.

지난 7월 25일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초고농도 방사능 수증기가 발생하고 있고 하루 300톤 이상의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가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뿐 아니라 다른 저장 탱크에서도 오염수가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가공할 만한 상황에 대해 도쿄전력은 통제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라고 손을 든 상태이다.

이에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유출된 방사능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공포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커지고 있다. '국제원자력사고평가 척도' 또한 레벨 1에서 레벨 3으로 격상되었다. 일본 앞바다만이 아니라 태평양 바다가 방사능으로 계속 오염되어가고 있는 것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엄혹한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 정부는 인접국가가 이른바 '방사능 괴담'이 입에서 입으로, 인터넷과 SNS를 타고 유포되자 그것을 근거 없는 소문으로만 일축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매뉴얼에 따라 인접국가에서 방사능의 대량 유출이 확인될 경우 발령해야 할 위기경보조차 내지 않았고 국민이 방사능에 대해 불안함을 표현하는 것을 '방사능 괴담 유포'로 규정하고 엄중히 처벌한다고 발표하기까지 했다. 국민의 불안과 공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국민이 무엇을 알기 원하는지 귀 기울이기보다 거꾸로 일본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안일하게 대응해 왔다.

사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런 불안들을 괴담이나 대정부불신감을 부추기는 것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방사능 관련 정보, 특히 피폭 경로로 빈도가 높은 먹거리의 안전에 대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안전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바로 시민들의 몫이며 권리이다.

특히 학교급식에 방사능 오염 먹거리가 공급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 조치이다.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일본산 국내산을 불문하고 이제 극에 달해있다. '우리나라 바다는 안전하다', '시중에 유통되는 생선은 안전기준치 이하이니 안심하

고 먹어라' 혹은 '학교급식 방사능 오염여부를 가려내는 작업은 예산과 절차상 매우 어려운 일이다'라고 대응하는 정부의 안일한 대응은 오히려 국민의 분노를 더욱더 촉발시킬 뿐이다.

2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조례 제정은 국민불안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뒤늦게 정부가 일본 8개현에서 잡히는 모든 종류의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기로 발표했다. 그러나 하루 300만톤 이상의 방사능 오염수가 배출되는 상황에서 8개현 이외에서 잡히는 생선이 안전하다 보장할 수 없다. 실제 8개현에 속하지 않은 홋카이도와 도쿄만에서 잡히는 생선은 오히려 더 높은 세슘 오염수치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제한적 수입금지 조치는 한계가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는 여전히 일본정부의 정보와 기준에만 의존하고 있다. 국민에게 일본의 검역을 신뢰하라는 이야기인 것이다. 원산지도 표시되지 않고 있고 검역도 주 2회에 불과하며 수입물량에 관계없이 수입전당 샘플조사만 하고 있는 상황은 여전히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 먹거리의 방사능 안전여부를 시민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방사능에 취약한 성장기 어린이와 유아들이 어린이집이나 학교 급식 등을 통해 내부 피폭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일은 시간을 미룰 수 없는 너무나 절박한 사안이다.

방사능은 소량이라도 있는 만큼 위험하다는 것은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이후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방사능이 지속적으로 인체에 축적되면 암 발생률이 그에 비례하여 증가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방사능 안전기준치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음식을 통해 가장 많이 방사능 피폭이 일어나므로 먹거리에는 방사능이 전혀 없어야 하며 방사능에 세포분열이 왕성한 유아와 성장기 어린이의 먹거리는 더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전국 각지 지방 의회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 방사능 오염 먹거리를 분별하고, 방사능 오염 식자재를 상시적으로 감시하여 방사능 오염 식자재를 유치원 및 어린이집, 학교급식에서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결과 국내에 유입된 일본산 수산물 가운데 일부가 원산지를 속여 학교 급식으로 납품됐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방사성물질 세슘이 검출된 일본산 수산물 백수십여건이 시중에 유통됐다. 지난 3년간 전국에서 학교 급식 재료로 납품된 일본산 수산물의 양은 4천3백 여 kg에 달하고 있고 많은 수가 국산으로 둔갑하여 식자재로 제공되었다. 또한 사전검수 한 번 없이 사용되는 식자재들이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급식에 방사능 오염 식자재가 사용되지 않았을까 하는 학부모들의 불안은 더욱 커졌다. 더군다나 얼마 전 뉴스에서, 일본 관동지역 어린이들의 소변에서 세슘이 검출되고 있

음이 알려진 후 그 불안감은 더욱더 커져가고 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부흥을 외치며 후쿠시마 농수산물에 안전하다고 홍보하면서 오히려 먹거리 소비를 부추겨왔고, 그 결과는 어린이들의 심각한 내부피폭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일본의 학교급식에 방사능오염 식자재가 공급되었음이 밝혀졌는데, 학교급식에 불안해하는 학부모들은 급식을 거부하고 도시락을 싸는 등의 개인적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미 후쿠시마 주변 지역 및 관동지역 어린이들이 갑상선에서 결절이 나타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이유없이 코피를 쏟는 아이들도 많아지고 있다 한다.

이런 상황에서 녹색당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전국 시의회에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물질 검사 및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시행하도록 제안하는 것은, 방사능 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장 시급하고 기본적인 조치를 시행하라는 당연하고도 절박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3. 한국YWCA는, 방사능으로부터 오염된 먹거리 감시강화 운동 및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제정 운동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한국YWCA는 탈핵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최근 여러 시민단체와 더불어 후쿠시마 핵발전소 유출 방사능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활동에 힘을 기울여왔고 방사능에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하도록 요구했다. 지난 8월 7일부터 부산 YWCA를 비롯한 동부지역 YWCA를 시작으로 전국의 YWCA가 370Bq/Kg으로, 일본보다 3.7배나 높은 현재의 방사능 안전기준치를 '핵전쟁 방지를 위한 의사회'가 제시한 8Bq/Kg 정도의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출 것과, 모든 식품에 방사능 오염도를 표시도록 식약처에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서명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미 부산YWCA는 방사능오염수 누출 문제가 공표되기 전부터 일본산 수산물과 국내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정도를 조사하는 사업을 벌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생협을 통해, YWCA 산하 유치원 및 YWCA 생협 식재료 납품을 원하는 30여개 어린이집에, 방사능에 안전한 먹거리임을 조사해 그것이 입증된 식재료를 공급하는 활동을 해왔다. 또한 부산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추진위원회'를 결성, 오는 10월 25일 부산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조례안을 심의하도록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9월 2일 명동 한국YWCA연합회 건물 앞에서 진행된 '방사능 오염 먹거리 감시 강화 촉구 캠페인'은 방사능 안전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확인된 자리였다. 점심시간 명동일대를 오가는 시민들은 캠페인에 적극적이며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고, 방사능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줄을 서서 기다려 서명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참가했고 이는 전국 52개 회원YWCA가 벌인 캠페인에서도 같은 모습이었다.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사태가 아무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명백해진 작금의 상황에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도록 요구하는 것은 수없이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다. 앞으로도 한국 YWCA는 방사능으로부터 오염된 먹거리 감시 강화 운동을 계속할 것이며, 52개 회원YWCA와 함께 각 지역에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방사능과 핵발전소의 위험이 없는 사회의 실현을 위해 여러 형태의 탈핵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토론 2

경기지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 · 급식운동 사례

안명균 | 경기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경기지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급식 운동 사례

안명균 (경기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1. 경기도 교육청 방사능 급식 안전급식조례 제정과 문제점

- 전국 최초로 2013년 6월 24일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가 발의되어(경기도교육의원,도의원 12명 발의) 제정됨
-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이라는 조례의 목적은 긍정적이지만, 조례내용에서 방사능오염식재료의 기준을 국가기준치를 초과한 식재료로 정해 실효성이 전혀 없는 조례로 제정됨
- 조례 제정 과정에서 발의 의원들이 급식관련단체,시민단체 등과 협의 과정이 전혀 없어 시민사회는 내용에 대한 공유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채 조례가 제정 됨
(경기도 의회의 특이 점 - 도민의 낮은 관심 등)
- 결국 녹색당을 포함 한 시민사회의 늦은 대응과 경기도 교육청과 경기도의원들의 편의적 사업 진행 방식 문제로 제정 보다 더 어려운 조례 개정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상황

2. 경기도 교육청 방사능 안전급식 검사 문제

- 경기도 교육청은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선 간이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내 모든 학교에 방사능간이측정기를 공급하여 식재료 방사능검사를 진행하려고 함.
- 경기녹색당 이에 대한 의견 전달

교육감, 교육청 친환경급식과 전달 내용

경기도 교육청이 계획하여 진행하고 있는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선 간이검사 계획에 대해, 전화로도 말씀드렸지만, 식재료 방사능 오염은 간이측정기로 측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검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실효가 없는 것으로 행정력의 낭비와 예산 낭비가 우려됩니다.하여 급하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자 최근 방사능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있는 김익중 동국대의대 교수의 의견을 받아 전달해 드립니다.

참조 부탁드립니다.

안명균(경기녹색당 운영위원장, 전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국의대 김익중 교수입니다. 귀 기관의 계획서를 보고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귀 기관은 학교마다 간이측정기를 구입하여 급식재료에서 방사능을 측정하겠다는 계획을 갖고있

는 듯 합니다만 이 계획은 철회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간이측정기로는 기준치의 몇배가 되는 1,000 베크렐 이상이 되어야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간이측정기로 측정해서 세슘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식품이 오염되지 않았거나 1,000 베크렐 이하로 오염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식품에서 방사성 세슘이 발견된 경우는 거의 일본산 수산물에 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염범위는 0.5 베크렐에서 25베크렐 사이입니다. 대부분이 10 베크렐 이하로 발견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1,000 베크렐 이하는 측정할 수 없는 간이측정기로 식품의 오염도를 측정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식품 오염도의 측정은 오직 게르마늄 측정기를 사용해서 실시해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 게르마늄 측정기는 현재 우리나라 연구소, 정부기관, 대학 등에 비치되어있으며 약 100대 정도가 있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 기관을 이용하여 측정하던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따로 구입하여 측정할 수 있습니다. 게르마늄 측정기는 약 1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교육청마다 2대 정도를 비치하고 전문인력 한명을 배치하면 급식재료들을 측정하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간이측정기를 한대씩 각 학교에 비치하는 것은 좋은 계획입니다. 생활방사능이 학교에서도 검출될 수 있으니깐요. 그러나 이 간이측정기로는 식재료의 오염 여부를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구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급식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식자재를 배제하고 싶으시다면 게르마늄 측정기를 구입하여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국의대 교수 김익중 드림

3. 학교급식 일본산 식재료 사용 정보 공개 활동

- 경기교육청에 정보 공개 요청
- 경기도의원, 교육의원을 통한 정보 공개 요청
- 진행과정에서 결국 경기녹색당의 정보 공개 요청은 협의를 통해 도의원, 교육의원, 국회의원의 정보 요청으로 같이 진행 됨
- 교육청과 각급 학교의 일본산 식재료 관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 확인
(녹색당 논평으로 발표)

4.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과 방사능 안전 급식을 위한 기타 활동

-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일인 시위 진행
(안양,군포,의왕 지역을 중심으로 생협,시민단체와 함께 진행 - 경기녹색당 제안)
(성남 재래시장 전체와 안양 호계시장, 군포 산본시장 일본산 수산물 청정지역 선언)
- 학교급식 방사능 재료 차단,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경기녹색당 현수막 각 지역에 부착

5. 방사능 안전 급식을 위한 조례 개정과 검사 체계 마련을 위한 활동 방향

- 경기도 교육감 면담 요청, 경기도의원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 요청 중
진행과정에서 무상급식을 둘러싼 김문수경기도지사와 교육감, 경기도의회의 갈등 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기자회견 등 공개적인 문제 제기 방식을 진행하지 않고 있음.
- 면담, 간담회 등의 제안은 지역 연대와 이후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경기환경운동연합과 생협 등 안전한 먹거리 관련 단체, 경기녹색당이 공동으로 진행

<첨부자료>

방사능 오염에서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간담회 제안서

<간담회 제안 내용 요약>

- 학교급식의 식재료 방사능오염검사 체계 마련
-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
- 일본산농수산물, 농수산물가공품 학교 급식재료 사용 중단

<제안배경 >

-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일본산 수입수산물에서 세슘이 검출되고 있음. 또한 수입산 또는 국내산 식품에 대해서도 방사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그러나 국내에서는 세슘에 오염된 수입수산물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정한 허용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로 통관되어 유통되고 있는 실정임. 그에 따라 방사능에 취약한 어린이·청소년이 자신도 모르게 방사능물질이 들어간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내부피폭을 당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음.
- 경기도의 경우 올해 8월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마련되었으나 사용제한내용이 “국가기준치”로 한정되고, 방사능 검사에 대한 의무사항이 부재하는 등 실질적으로 방사능에서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조례로서 기능을 할 수 없음.
- 이에 학교급식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한 제대로 된 안전체계를 갖추고, 실질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조례로 개정하기위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함

<관련현황1> 방사능 검사현황

○ 아래 수치를 보면, 명태, 대구, 고등어 등 많은 일본산 수산물에 방사능에 오염된 채로 수입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명태 등의 수산물 뿐 아니라 표고버섯에서도 방사성 세슘이 검출되었다

국내산 농수산물 방사능 검출 음식물 목록

구분	음식물(원산지)	검출 방사능	검출치 (Bq/kg)	측정기관	측정일	의뢰인
3	국물용마른멸치 (국산-수협중앙회) 2011.3.이전 수획)	세슘 137	0.136±0.0347	영광	3.2.	시민
4	말린표고버섯 (전남장흥)	세슘 137	2.15±0.104	영광	3.12.	
			1.65±0.11	울진	3.14.	
5	말린표고버섯 (북한)	세슘 137	1.42 Bq/kg	월성	3.30.	

2012.01.01 ~ 2012.04.25까지 방사능이 검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현황
(방사능 검출된 품종의 전체 수입물량, 검사결과 검출된 품종의 양)

연 번	일 자	품 명	수입 량(kg)	검출치 (기준 ¹³¹ I:300Bq/kg, ¹³⁴ Cs + ¹³⁷ Cs:370Bq/kg이하)	
				¹³¹ I (요오드)	¹³⁴ Cs + ¹³⁷ Cs (세슘)
1	1월5일	냉장명태	8,656	불검출	1.37
2	1월10일	냉동고등어	72,000	불검출	5.32
3	1월10일	냉동고등어	120,000	불검출	5.12
4	1월11일	냉장명태	10,700	불검출	3.97
5	1월17일	냉장명태	3,000	불검출	1.98
6	1월25일	냉장명태	3,900	불검출	2.36
7	1월27일	냉장명태	2,696	불검출	1.81
8	1월30일	냉동고등어	72,000	불검출	4.05
9	2월3일	냉장명태	4,000	불검출	4.49
10	2월6일	냉장명태	10,950	불검출	2.64
11	2월7일	냉장명태	14,092	불검출	2.07
12	2월8일	냉장명태	16,099	불검출	2.25
13	2월10일	냉장명태	10,200	불검출	0.54
14	2월10일	냉장명태	2,626	불검출	2.02
15	2월13일	냉장명태	8,750	불검출	1.30
16	2월14일	냉장명태	8,944	불검출	1.96
17	2월15일	활돔돔	515	불검출	3.04
18	2월15일	활방어	4,801	불검출	6.24

연 번	일 자	품 명	수입 량(kg)	검출치 (기준 ¹³¹ I:300Bq/kg, ¹³⁴ Cs+ ¹³⁷ Cs:370Bq/kg이하)	
				¹³¹ I (요오드)	¹³⁴ Cs+ ¹³⁷ Cs (세슘)
19	2월16일	냉동고등어	24,000	불검출	3.50
20	2월17일	냉장명태	1,222	불검출	2.30
21	2월17일	냉동고등어	72,000	불검출	3.37
22	2월17일	냉동고등어	24,000	불검출	4.37
23	2월20일	냉동고등어	24,000	불검출	4.72
24	2월22일	냉장명태	3,250	불검출	3.65
25	2월23일	냉동고등어	72,000	불검출	4.82
26	2월23일	냉장명태	8,610	불검출	1.52
27	2월28일	냉장명태	3,900	불검출	1.84
28	2월29일	활물돔	750	불검출	4.96
29	3월2일	냉동고등어	24,000	불검출	3.54
30	3월2일	냉동고등어	24,000	불검출	4.58
31	3월2일	냉동고등어	222,750	불검출	5.48
32	3월2일	냉장명태	2,840	불검출	4.91
33	3월7일	냉장명태	1,092	불검출	2.77
34	3월7일	냉동명태	99,000	불검출	3.27
35	3월9일	냉동고등어	72,000	불검출	6.93
36	3월14일	냉동고등어	48,000	불검출	3.08
37	3월15일	냉동고등어	120,000	불검출	3.62
38	3월15일	냉장대구	1,220	불검출	2.20
39	3월15일	냉장대구	220	불검출	2.49
40	3월23일	냉동고등어	48,000	불검출	3.66
41	3월23일	냉동방어(F,포장횡감)	145	불검출	5.19
42	3월26일	냉동고등어	49,500	불검출	3.60
43	3월26일	냉장대구	650	불검출	24.69
44	3월28일	냉동고등어	48,000	불검출	6.46
45	3월29일	냉장대구	190	불검출	20.7
46	3월30일	냉동고등어	24,000	불검출	7.17
47	3월30일	냉동고등어	24,000	불검출	5.08
48	3월30일	냉동고등어	24,000	불검출	4.91
49	4월2일	냉장대구	1,600	불검출	4.24

연 번	일 자	품 명	수입 량(kg)	검출치 (기준 ¹³¹ I:300Bq/kg, ¹³⁴ Cs+ ¹³⁷ Cs:370Bq/kg이하)	
				¹³¹ I (요오드)	¹³⁴ Cs+ ¹³⁷ Cs (세슘)
50	4월2일	마른고등어(훈제)	2,200	불검출	5.69
51	4월4일	냉장대구	1,022	불검출	7.59
52	4월6일	냉동고등어	46,500	불검출	2.93
53	4월9일	냉동방어(F,포장유통)	156	불검출	4.94
54	4월12일	냉장대구	1,040	불검출	8.09
55	4월12일	냉장대구	2,529	불검출	2.60
56	4월12일	활돔돔	1,775	불검출	2.77
57	4월12일	냉동고등어	24,000	불검출	3.95
58	4월12일	냉동고등어	72,592	불검출	7.04
59	4월16일	냉장대구	1,240	불검출	24.53
60	4월16일	냉장방어(젓방어)	12	불검출	2.14
61	4월17일	냉동고등어	144,000	불검출	2.40
62	4월17일	냉동고등어	60	불검출	3.15
63	4월17일	냉동고등어	36,075	불검출	2.90
64	4월18일	냉장방어(젓방어)	11	불검출	6.63
65	4월20일	냉동고등어	72,000	불검출	3.52
66	4월20일	냉동고등어	24,000	불검출	3.75
67	4월20일	냉장방어	27	불검출	0.65

정밀검사용 검체의 채취는 「식품공전 제9.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6. 개별 검체 채취 및 취급 방법」에 따라 관능검사 채점대상 수산물에서 무작위로 채취(3~5kg)하며 이를 균질화하여 정밀검사(1kg)를 실시함

<관련현황4> 경기도 학교급식의 일본산 수산물 사용현황

2012년 국정감사 자료 중 경기도내 학교급식에 납품된 일본산 수산물 현황(윤은혜 의원)

학교별 수산물 납품업체 현황('11.3.1~'12.6.30)

시도	학교명	급식학생수('12.6월기준)	납품업체명	납품품목	납품수량(kg)	원산지	비고
경기		1,300	수협단체 급식사업단	연어살	90	일본산	
경기		650	수협단체 급식사업단	연어살	30	일본산	
경기		1,045	수협단체 급식사업단	연어	74	일본산	
경기		1,164	민완에프에스	연어살	109	일본산	
경기		998	산수수산	연어	60	일본산	

*구체적 학교명 삭제

일본산수산물 급식사용량 관련 경기도 교육청의 정보공개 내용 (2013년9월)

2011년~현재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물가공품 사용현황

1. 상기 수산물 급식량 연도별 총량

(단위:kg)

구분	연도			합계	비고
	2011	2012	2013		
수입수산물 총량	37	45	44	125	

2. 상기 수산물 급식량 월별 총량 : 자료 없음

3. 상기 수산물 급식량 지역별 총량, 구체적인 지역명 표기

(단위:kg)

구분	연도			합계	비고
	2011	2012	2013		
수원시	-	9	11	20	
성남시	9	-	1	10	
안양시	7	9	6	22	
과천시	-	-	-	-	
부천시	3	-	-	3	
광명시	-	-	-	-	
안산시	-	-	-	-	
평택시	5	5	7	17	
군포시	-	-	-	-	
의왕시	-	-	-	-	
여주군	-	-	-	-	
화성시	0	2	0	2	
오산시	3	5	4	11	
광주시	0	-	-	0	
하남시	-	-	-	-	
양평군	-	-	-	-	
이천시	-	-	-	-	
용인시	3	7	3	12	
안성시	-	-	-	-	
김포시	-	-	-	-	
시흥시	-	-	-	-	
의정부시	-	-	-	-	
동두천시	-	-	-	-	
양주시	-	-	-	-	
고양시	7	8	5	19	
구리시	-	-	2	2	
남양주시	-	-	1	1	
파주시	-	-	-	-	
연천군	-	-	-	-	
포천시	-	-	-	-	
가평군	-	-	5	5	
합계	37	45	44	125	

<관련참고자료 1>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관련 조례

1. 사용을 제한하는 “방사능오염식재료”를 “국가기준 허용치를 초과한 식품”으로 한정
2. 방사능오염물질 검사에 대한 의무규정 부재
3. 정보공개에 대한 의무규정 부재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사능오염물질을 사전예방하여 방사능오염물질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하고 도내 학교급식에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을 사전 차단하여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방사능오염식재료”는 국가기준 허용치를 초과한 식품으로 한다.

② 세슘, 요오드 등 방사능오염물질의 종류와 허용기준에 관하여는 제6조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은 성장하고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과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실태검사) 교육청은 급식학교를 대상으로 방사능 오염 실태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학교에 알리도록 한다.

제5조(영양교사와 영양사 교육) 교육감은 영양교사와 영양사 교육 또는 연수시 방사능 오염식재료 섭취의 영향과 사례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관련자료 고지 등) 교육감은 필요시 세계보건기구, 국제원자력위원회, 한국원자력 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발표하는 방사능 오염에 관한 자료를 학교에 알리도록 한다.

제7조(표본조사) 교육감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하여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방사능오염 식재료에 관한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참고자료 2>

서울특별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원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방사성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사성물질”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물질로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루토늄을 포함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검사를 실시하고, 방사성물질이 검출될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4조(방사성물질 검사 체계)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정기 및 수시로 검사하여야 하되, 학교별로 연 2회 이상 사전 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검사체계를 갖춰야 한다.

② 학교급식과 관련되어 설치된 센터 또는 학교는 전항의 검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교육감은 서울특별시장과 협력하여 전항의 인력과 장비를 공동으로 마련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제5조(학교급식 방사성물질 감시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방사성 검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학교급식 방사성물질 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교급식이나 먹거리안전, 방사성물질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그 중 3분의1 이상은 학부모 중에서 공모하여 위촉하고, 3분의1은 서울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학교 급식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되,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공동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1.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사의 검사체계, 품목, 방식, 시기 등이 포함된 연간 방사성물질 검사계획

2.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등을 감안한 방사성물질 검출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의 지정

3. 학부모, 영양(교)사, 조리사 등 급식관계자에 대한 교육계획

4.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 및 연구방안

5. 그밖에 교육감이나 위원장, 위원 5명 이상이 본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제안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정기회는 매년 분기별로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교급식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자료조사)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을 방문하여 수집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방사성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교육감은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위원회와 해당학교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 교육감은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를 유효자리 한자리까지 표시하여 교육청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해야 한다.

제12조(방사성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에 대한 조치) ① 학교의 장은 방사성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사성물질 검출가능성이 높은 식재료를 고시할 수 있다.

제13조(업무협조) 교육감은 본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외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영양교사와 영양사 및 조리사 교육) 교육감은 영양교사와 영양사 및 조리사의 교육 및 연수에 방사성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사능 오염에서 안전한 경기도 학교를 위한 간담회 제안서

○ 미국 과학아카데미에서 발행한 BEIR 7의 보고서에 따르면, 피폭량과 암발생은 비례한다는 결론을 내고 있다. 즉, 방사능에 피폭되면 그 피폭된 양에 비례해서 암발생 확률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기준치 이하에서도 피폭량에 비례해서 암발생이 증가한다는 것이 세계 의학계의 결론이다. 따라서 국가마다 다양하게 설정되어있는 기준치는 안전기준치가 아니라 상업적 관리기준치인 것이다.

○ 방사능 내부피폭은 적은 양이라도 방사능 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섭취, 체내에 축적될 경우 나타나는 위험성은 체르노빌사고이후 의학계에서 계속 보고되어 왔고, 후쿠시마 사고이후 일본 내 유명인들의 방사능오염 축적과 내부피폭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이 피해가 성장기의 어린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유해성은 더욱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 상기에서 살핀 바 식재료의 방사능 검사현황과 경기도내 일본산 수산물 사용현황에서 식재료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고 있고, 특히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경우 지속적으로 검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현재 경기도내 학교급식은 검사체계, 관리, 관련법령에 있어서 많은 부분 보완이 필요하며, 특히 학교급식관련 조례는 있어서 오염식재료의 기준을 “국가 기준치”로 정해 이에 관한 개정논의가 시급하다.

○ 우선적으로 일본산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급식재료사용을 전면중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경기 환경운동연합은 도내 어린이, 청소년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교육감이하 관련담당자와 제 단체가 함께하는 방사능 오염에서 안전한 학교를 위한 간담회를 제안하는 바이다.

토론 3

강원녹색당의 방사능 안전급식 정책활동 내용과 사례
<방사능오염대응 안전한 학교급식 마련을 위한 강원대책위> 활동을 중심으로

박설희 | 강원녹색당 운영위원장

강원녹색당의 방사능 안전급식 정책 활동 내용과 사례

- ‘방사능오염대응 안전한 학교급식 마련을 위한 강원대책위’ 활동을 중심으로-

박설희 (강원녹색당 운영위원장)

강원녹색당은 올 초 2월 20일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 구체적인 이슈와 활동을 통해 지역에서 녹색당의 존재감과 알리고 공당(公黨)으로서의 역할을 찾고자 하였다.

‘탈핵’이라는 의제는 전국사무처와 지역녹색당 전반의 주요 활동의제이기도 하다. 강원녹색당 또한 강원지역의 경우, 현안지역을 제외하고 탈핵이슈가 확산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생활의제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포스트 후쿠시마 시대에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판단을 미룰 수가 없었다. 이에 당원모임이 진행되는 지역(춘천, 원주, 화천 등)을 중심으로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당원 구성과 지역 특성상 지역농업먹거리와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이 확인되었으며, 논의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문제가 바로 방사능 먹거리 안전이었던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지역차원에서 이미 방사능 오염 식재료 사용제한과 안전기준에 대한 관심들이 확인된 셈이었다.

1. 강원녹색당은 먼저, 지역에서 녹색당과 함께 탈핵이슈로 연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인과 단체들이 궁금해졌다. 지역의 생협, 노동, 시민단체 등에 ‘0.23 μ SV - 후쿠시마의 미래’ 공동체상영회 제안서를 보냈다. 총 8개 단체가 공동주최하는 가운데 지난 5월 28일 지역순회 및 공동체 상영회를 실시하였으며, ‘핵없는 세상을 위한 27가지 기원’을 함께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에서 원전, 방사능, 탈핵에 관한 그동안의 관심과 염려, 의구심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무척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이어 강원녹색당의 활동의 기초를 설명하고 탈핵이슈와 관련한 후속모임에 대한 소개를 하였다.

2. 공동체상영회가 끝나고 곧바로 방사능 수산물에 안전한 학교급식 대책마련을 위한 활동을 제안하였다. 강원녹색당은 이미 친환경학교급식운동을 하고 있었던 ‘친환경 학교 의무급식 실현을 위한 춘천네트워크’(이하 춘천급식네트워크)와 지역먹거리에 공통관심을 두고 있으며, 방사능먹거리에 민감한 지역생협(한살림, 춘천지역생협, 자연드림)에게 공동연대를 제안하였다. 이번 제안을 통해 기존 춘천급식네트워크에는 포함되지 않은 생협조직들도 포함하게 된 것이다. 이에 지난 7월 2일, 방사능 안전 급식 정책활동을 위한 ‘방사능오염대응 안전한 학교급식 마련을 위한 강원대책위’(이하 강원대책위)를 결성하였다.

3. 강원대책위는 현재까지 정기모임을 꾸준히 가지고 있다(월 2회). 지금까지의 논의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생협단체들이 방사능 먹거리 대응을 어떻게 하였는지 공유하였다. 특히, 각 단체별 검사의뢰처와 독자기준치에 대한 내부토론 의견을 알 수 있었고, 조합원들에게 투명한 정보공개 활동을 통해 선택권을 주고 먹거리안전에 대한 신뢰감을 주고 있었다.
- 방사능이 아이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부하고, 일본 방사능 누출 상황을 수시로 업데이트 하여 공유하였다.
- 타 지역 조례를 검토하였다. 녹색당 전국사무처와 '우리가 그린 내일'의 도움을 받아 방사능의 제 전반에 대한 정보와 서울·경기 지역의 조례추진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 받을 수 있었다.
- 생협 매장을 중심으로 '강원도 학교급식, 어린이집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 조례 만들기 서명'을 꾸준히 받고 있다.

4. 강원대책위는 강원도청과 강원도 교육청에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별첨1 참고)

- ▶ 강원도와 강원도 교육청은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합니다
- ▶ 강원도와 강원도 교육청은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높은 식품들에 대해 철저하게 검사하고 이를 차단해야 합니다!
- ▶ 강원도와 강원도 교육청은 방사능 검사를 위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검사 수치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5. 지역언론에서도 방사능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반영하기 시작하였고, 대책위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 신문기고, 취재요청서 제출, 방송 인터뷰 등 (별첨2 참고)

[기획] “지자체 차원 방사능 대책 필요하다”[방사능 먹거리 안전 논란 ①] - 도교육청, 급식 관련 대책 마련 위한 논의 시작

시민단체들, 자체 검역 시설·시스템 구축 촉구, 9월 30일자, 강원희망신문

[기획] “정부의 미흡한 대처가 불안감 키워”[방사능 먹거리 안전 논란 ①] - 검역 기준 일보다 3배나 느슨, 조정안도 일본 수준

수산물 상인·횃집 업체 매출 30~50% 대폭 감소, 9월 30일자, 강원희망신문

[기고] 한재천, "방사능 오염 수산물이 의미하는 것" 9월 14일자, 강원희망신문

- 춘천CBS 포커스 937 방송 인터뷰

6. 강원도 교육청과 교섭을 진행하였다. 먼저는 방사능 먹거리 대책 토론회를 개최해 줄 것을 제안하였으나, 압박용 토론회 선 개최 형식(별첨 3)보다는 실제로 방사능 학교급식 대응책이 마련되는 실제적인 진도에 초점을 맞추어 몇 차례의 간담회를 가진 후 방사능안전 학교급식 전담 TF팀을 꾸리기로 하였다. 먼저는 학교급식 담당부서 공무원들을 방문하여 의사를 파악하였으나 초

반에는 담당공무원이 소극적이었으며, 국가관리기준치 적용과 관리책임에 부담을 느끼는 등 기존방식을 고수하는 태도를 보였다. 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다방면의 접촉을 시도한 결과 담당 공무원 뿐만 아니라 다방면의 인사들에게 접촉을 시도하여 방사능 문제의 시급성을 적극 공유하고 관련하여 강원도 교육청이 책무를 다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하였다. 8월 14일, 간부회의를 통해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이 강원대책위의 제안을 학부모와 강원도민의 제안으로 받아들여 전격 수용하면서(보도자료5-별첨4) 강원도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안전성 확보를 위한 T/F팀 협의회>가 구성되었다. 이에 강원대책위에서 4명의 자문위원이 들어가게 되었다. 강원도교육청은 정책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지난 9월 6일 김익중 교수 강연회를 주최하였다. 강연을 듣고 휴대용 검사도구 구입 계획을 변경하기로 하였다.

- 1차 방사능안전 TF팀 10월 2일 오후 3시 ~ 4시 30분 진행
- 2차 방사능안전 TF팀 10월 25일 오후 3시 예정

7. TF팀은 강원도 차원에서 방사능안전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에 합의, 방사능안전 조례를 추진하기 위한 별도팀을 가동하기로 하였다. 토론회는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결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교육청 정책기획팀과 긴밀히 논의하는 가운데 강원대책위 주최로 치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8. 의회전체 일정에 따른 계획을 소략하자면 다음과 같다.

조례발의는 교육위원이나 교육청 자체 발의할 예정이며, 전문위 거쳐 11월 심의, 내년 2-3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의 “강원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와는 별도로 제정) 시급한 예산은 12월초 우선 반영하기로 의견이 모아져서 게르마늄 기계구입 예산을 책정하기로 하였다.

9. 강원대책위와 강원도 교육청은 강원도청과도 방사능안전 대책마련을 위해 강원도 방사능 검수시스템 구축 요구(장비와 인력)하는 등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그러나 강원도청은 방사능 학교급식 조례제정 문제보다는 영동 수산시장 침체에 더 관심을 가지는 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대책위도 강원도 어민들의 생계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해결책을 찾아갈 것이다. TF팀에서 강원대책위가 역할분담을 한 부분은, 도청 관계자를 방문하여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다. 한편, TF팀의 자문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는 영양사들은 팀내 역할분담을 통해 강원도만의 대체식단개발과 가공법 개발 등의 의지를 밝혀왔다.

10. 강원대책위 또한 방사능 먹거리 사용제한의 적용 대상을 학교급식에서 어린이 집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함께 논의하는 단위의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또한 강원대책위는 그동안 학교급식운동에 소극적이었던 학부모 조직 및 학교 운영위와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에 있다.

[별첨1]

강원도 학교급식, 어린이집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 조례 만들기 서명

불편한 진실! 지금도 후쿠시마 재앙은 진행 중입니다. 지하수로 스며든 방사능은 바다에 버려지고 방사능 수증기는 하늘을 떠다닙니다. 일본원전 방사능 문제는 국무총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과실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일본산 농수산물로부터 우리의 밥상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는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 현재 상황을 축소하지 말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정확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먹거리에 대한 일상적 불안과 공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어린이와 임산부는 성인에 비해 20배나 높은 방사능 민감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와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지금 세대들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도 스스로의 안전과 우리 아이의 건강을 지켜내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겠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방사선 내부피폭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 강원도와 강원도 교육청은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합니다
- ▶ 강원도와 강원도 교육청은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높은 식품들에 대해 철저하게 검사하고 이를 차단해야 합니다!
- ▶ 강원도와 강원도 교육청은 방사능 검사를 위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검사 수치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no	이름	주 소	연락처(이메일,전화)	서명
1				
2				
3				

(이하 생략)

[별첨2]

보도자료1 - 강원희망신문 8월 9일자

방사능 식품 우려 확산, 강원도 학교급식 대책 시급

일본산 수산물서 세슘 등 방사능 물질 검출

경기·서울은 학교급식 대책 조레 추진 중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 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돼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산 식품들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급식 재료에 대한 방사능 오염 대응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방사능에 오염된 식재료는 무엇보다도 어린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 무상급식이 이뤄지면서 학생들이 섭취하는 식재료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현재 방사능 식재료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는 게 현실이다. 농산물의 경우 농약 잔류검사를 하지만, 방사능 잔류검사는 엄격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이 농수산식품부에서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조사결과(2012년 4월~6월)'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명태, 대구, 고등어 등의 생선에서 요오드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세슘이 상당량 검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세슘은 자연방사능이 아닌 핵반응에 따라 발생하는 인공 방사능이다. 일본산 수입 생선에서 기준치 이하지만 세슘이 검출된 것은 방사능 오염 물질이 확인된 셈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에서는 방사능오염물질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인식하게 하고 도내 학교 급식에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을 사전 차단해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도록 하는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 의회에서도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강원녹색당과 춘천한살림, 춘천시민생협, 춘천 무상급식 네트워크 등의 환경 및 먹거리 관련 활동을 해오고 있는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대책모임을 꾸리고 방사능 오염 식품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내용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2일 대책모임과도 면담을 진행, 타지역 사례 공유와 향후 대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대책모임 관계자는 “국내 세습 기준치는 일본에 비해서도 3배나 느슨하다”면서 “도내에서 학교 급식을 위한 검사기준은 매우 엄격하게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방사능 측정기제도입과 조례안 마련 등 도교육청과 도에서의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모임은 일본의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물질 유출 문제의 심각성과 방사능 오염 식품의 폐해 등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도와 도교육청 등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달부터 서명전과 홍보물 배포를 할 계획이다. 또 내달 중에 가칭 ‘방사능오염대응과 안전한 학교급식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박용진 기자>

보도자료2- 강원희망신문 9월 14일자

[기고] 방사능 오염 수산물이 의미하는 것 - 한재천(강원녹색당 운영위원)

이번 일리치는 근대화될수록 상대적 사회빈곤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먹을거리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근대화될수록 식량의 불균등은 심화되고 음식의 질은 더욱 떨어진다.

지구촌 한쪽은 굶주리고 다른 한 쪽에서는 버려질 정도로 음식이 넘쳐나는데, 이 음식 또한 우리 몸에 맞는 자연그대로 온전한 식품이 아니다. GMO 옥수수나 콩처럼 유전자를 조작했거나 각종 유해첨가물이 들어간 식품들인데 점차 그 양이 늘어가고 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수산물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이후에는 식품의 질을 따지는 차원을 넘어 오염된 수산물 섭취가 몸을 해치는 위험의 차원이 되어버리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산업문명이 왜곡되게 진행되어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기보다는 예측할 수 없는 잠재적위험이 더 많은 세상에 살아가는 현대인들. 식탁에 오른 생선을 보고 허기를 달래기 앞서 ‘이 생선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 혹시 ‘이 생선에 방사능이 들어 있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며 먹어야 되는 처지가 되어버렸다.

방사능 오염 수산물은 기형적인 경제성장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다. 농부가 생산한 곡식이, 어부가 잡은 물고기가 하루하루 반복적으로 식탁에 올라오는 것은 인류의 일상 평범한 생활사이다. 인류는 지진이나 홍수 등 사람의 의지로는 어찌할 수 없는 자연재해를 겪지만 이 반복되는 일상 생활은 세대를 거쳐 이어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반복되리라 믿고 살아간다.

이 이상의 숭고한 삶의 진실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핵사고나 핵폐기물들은 쌓아 올린 삶의 토대를 순식간에 무너뜨린다. 경제성장의 산물이 떠받친 현대문명의 힘은 막강할 듯 싶지만 땅이나 공기나 바다가 방사능에 오염되어 버리면 생존의 토대인 일상적인 숨쉬고 먹고 하는 기본 욕구마저 채울 수 없는 모래위에 지은 성과 같은 것 일 수도 있다.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냉각수 유출이 견잡을 수 없을 정도인가 보다. 이 세기적 재앙에 기준치를 거론하기 전에 예방원칙에 따라 원칙적인 대응이 곧바로 마련되어야 한다. 날마다 300톤 이상의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사태의 심각함을 공유하고 일본수산물에 거부해야하며 일본수산물을 수입금지 해야 한다.

괴담이라 운운하는 정부를 믿고 있다가는 우리 아이들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가 따를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대응이 미온적이라면 각 가정에서 지역에서 먼저 자구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강원교육청에서 방사능수산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선제적인 대응은 매우 큰 의미 있는 일이다. 고통을 받고 있는 당사자가 바로 이곳에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식은 말 그대로 현장주의, 실천주의의 책임정치 및 자치행정인 것이다.

안전한 먹을거리 문제는 이제 세계적인 범위의 문제이자 생태가치관 및 상호책임의 문제이다. 지구촌 어느 한 곳의 핵사고는 지구인 모두에게 치명적인 민폐를 끼친다. 원전에 의지하는 발전을 성장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온 과거의 업보에 더 이상 영향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탈핵으로 나가야한다.

보도자료3 - 강원희망신문 2013년 9월 30일자

“정부의 미흡한 대처가 불안감 키워”

[방사능 먹거리 안전 논란 ①]

**- 검역 기준 일보다 3배나 느슨, 조정안도 일본 수준
수산물 상인·횃집 업체 매출 30~50% 대폭 감소**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 유입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불신까지 겹치면서 관련 상인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일본의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국민들 사이에서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었지만, 당국은 이같은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거나 일본 정부의 기준치보다 3배 이상 완화된 기준치 적용을 고수하는 등 안일한 대응을 해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방사능 먹거리 안전 실태 및 논란, 도내에서 진행중인 대응 논의 등을 다뤄보았다. <편집자 주>

▲지난 26일 속초시내 한 전통 시장의 수산물 점포에는 방사능 수산물 공포 확산의 영향으로 손님 발길이 뜸해졌다.

정부가 지난 6일 일본 후쿠시마 인근지역 8개 현에 대한 수입금지와 방사능 검사 기준치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시민들의 불안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면서 수산물 관련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춘천시내에서 횃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34)씨는 지난 여름 이후 손님이 급격하게 줄어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이씨는 “원래 여름이 비수기인 편이지만, 올해는 예년에 비해 40% 정도 손님이 줄어든 상황이다. 잘 알고 지내는 단골손님들 중에도 발길을 끊은 분들이 다수 있다”며 “이런 상황이면 업종을 바꿔야 하나 고민도 되지만 비용문제 등을 고려해 얼마간은 더 지켜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횃집뿐만이 아니다. 전통시장에서도 수산물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진지 오래다. 속초시 관광수산시장에서 40년 전통의 수산물 도·소매 거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전영란 사장은 “현재 거래하고 있는 업체들을 보면 서울 쪽은 예전에 비해 대략 50% 정도 거래가 줄었고, 지역의 경우는 30% 정도 줄었다”면서 “불경기로 인해 올해 전반적인 상황이 어려운 편이었는데, 7월을 전후로 해 방사능 논란이 있으면서 매출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데는 한국정부의 늑장대처와 안일한 대책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을 키웠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내에서 방사능 피폭 농수산물 섭취로 인한 내부피폭 사례가 알려지고,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수입되고 있다는 사례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자 수산물 전반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왔다. 급기야 후쿠시마 원전 인근 바다로 방사능 오염수가 흘러들어간다는 사실을 일본 정부에서 감추고 있다가 폭로되자 전국민적인 관심사가 됐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지역 8개 현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와 방사능 검사 기준치를 일본 정부와 동일한 100벵크렐로 조정한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이 조치가 방사능 피폭에 대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1년 3월 이후 방사능 검사를 한 이후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수산물의 68%가 일본 홋카이도와 도쿄지역에서 수입된 것이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에서 해당 지역은 수입제한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일본산 수산물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기타핵종(스트론튬, 플루토늄) 검사를 추가요구토록 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 있는 수산물에 대한 전면 차단한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현재 수입되는 수산물은 100벵크렐 미만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식약처는 홈페이지에 공개한 관련 자료에서 현행 기준치인 100벵크렐의 생선을 연간 10kg(1인당 평균 생선 섭취량) 섭취할 경우 방사능 피폭량이 0.013밀리시버트(mSv)로 사람이 자연상태에서 피폭되는 자연방사선 평균치인 2.4mSv의 0.5%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방사능 기준치 자체에 대해 안일한 판단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기도 한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는 “현재 바다로 흘러들러가고 있는 오염수에서는 스트론튬, 삼중수소 등 수많은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있는데, 방사성물질은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적다고 안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스트론튬이 배출하는 방사선의 한 종류는 세슘의 10배이고, 삼중수소는 세슘의 100배 수준이다.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 역시 방사선량과 암·백혈병 발병률과의 관계에 대해 방사선량이 많아질수록 암·백혈병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방사선량이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최소량은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2006년에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정부가 기타 핵종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국내에 스트론튬을 검사하는 장비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 대책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1년 3월 이후 2년간 수입된 일본 수산물 가운데 세슘이 검출된 것은 모두 131건으로 이 가운데 97.8벵크렐을 보인 대구를 포함해 10벵크렐을 초과한 수산물도 7건이 있었지만 그대로 유통됐다. 세슘은 자연상태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물질이기 때문에 원전 사고 등의 영향으로 내부피폭된 수산물이 시중에 유통된 경우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시민들은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대만 등과 다른 우리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대한 불신감이 여전하다.

한재천 강원녹색당 운영위원은 “사실 일본 원전 사고 직후부터 방사능 식재료, 특히 수산물들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는데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관련 정보들조차 괴담이라며 부정하기 바빴다”며 “방사능이 심각한 질병을 유발한다는 엄연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조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기자>

보도자료 4 - 강원희망신문 9월 30일자

“지자체 차원 방사능 대책 필요하다”

[방사능 먹거리 안전 논란 ①]

- 도교육청, 급식 관련 대책 마련 위한 논의 시작

시민단체들, 자체 검역 시설·시스템 구축 촉구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으로 진행되면서 지역 차원의 보다 강화된 통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와 생활협동조합 등 민간에서 논의와 대응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협동조합인 ‘한살림’에서는 방사능 물질에 대한 독자적인 기준치(성인 8벵크렐, 영·유아 4벵크렐)를 마련하고 한국 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 방사능 물질을 검사하고 있으며, 검출 여부와 검출량을 표기해 공개하고 있다.

강원녹색당과 춘천한살림, 춘천시민생협, 춘천 무상급식 네트워크 등의 환경 및 먹거리 관련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들은 한편으로 방사능 식재료와 관련한 대책모임을 꾸리고 방사능 오염 식품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관계 기관에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이들은 특히 방사능 내부 피폭에 더 취약한 청소년들의 학교급식 재료에 대한 대응 논의가 시급하다고 보고 적극적인 정책 제안을 해왔다.

이와 관련해 도내 정책당국 가운데서는 도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방사능 식재료에 대한 급식 대책과 관련해 민병희 교육감이 현황 파악과 관련 대책을 논의하라고 지시한 이후 도교육청은 대책모임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5일 방사능 먹거리와 관련한 강연을 개최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대책모임, 교육청 공무원, 영양사 등이 참여 하는 TF팀을 꾸리고 구체적인 관련 대책 논의를 시작했다.

TF팀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자는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학생들의 급식과 관련해 우리보다 먼저 조례를 제정했지만,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도민들과 학생·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내용의 대책을 내놓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계자들은 급식재료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를 위해서는 비용이 들더라도 정밀 검사기계의 도입과 급식재료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를 위한 구조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대책모임 한재천 강원녹색당 운영위원은 “방사능 식재료에 대한 대응을 위해 최소한 방사능 오염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정밀 기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울시의 경우 이 정밀 기계가 간이 측정기로 대체됐는데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측정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뿐만 아니라, “현재 도내 급식 구조상 식재료 구입이 학교별 개별 입찰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최소한 지역 차원의 급식지원센터 등을 통한 통합적인 유통구조를 마련해 이를 관리·통제하는 구조를 만들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급식재료 뿐만 아니라, 도내에서도 자체적인 검사 기구를 갖추고, 검사·유통 기준을 조례 등으로 제정할 필요가 제기되기도 한다. 현재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강원보건환경연구원’에 방사능 정밀 측정기가 있지만 노후해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급식재료에 대한 관리를 진행한다면, 도에서는 이와 별도로 정밀 측정기를 도입해 도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거나 별도의 강화된 검역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도에서는 방사능 먹거리 문제와 관련해 별도의 대응 매뉴얼이나 전담 기구나 담당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도차원의 (방사능 먹거리)관리를 위한 별도의 기준이나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따로 담당 기구가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재천 강원녹색당 운영위원은 “조류독감이나 구제역 등이 발생하면 구체적이고 신속한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이 있지만, 방사능 물질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기준이나 전담기구 등이 없는 실정”이라며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매일 300t이 넘는 오염수가 유출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위기가 아닌 장기적이고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걸맞은 조치를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기자>

[별첨3]

수 신 : 강원도 교육청 담당자

제 목 : 방사능오염대응 안전한 학교급식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발 송 일 : 2013. 8. 1

1. 강원교육 발전과 학생들 건강을 위해 학교급식 관리에 애쓰시는 교육청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 최근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문제들이 심각해지고 일본수산물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방사능수산물들이 제대로 걸러진 후에 학교급식에 들어가는지 학부모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3. 강원지역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가 실시되고 있는지, 방사능을 검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선학교에 어떤 지침이 내려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 강원지역 학교급식에 방사능 대책마련을 위해 방사능 위험 실태를 알아보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함께 모색해보기 위해 아래와 같이 토론회 공동 주최를 요청 드립니다.
5.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방사능수산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강원교육청에서 적극 협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방사능오염대응 안전한 학교급식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세부 계획안 별첨)

- 일시: 2013년 9월 둘째 주

- 장소: 추천가능

방사능오염대응 안전한
학교급식 마련을 위한 강원대책위

별첨

『방사능오염대응 안전한 학교급식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토론회 개최 계획(안)

■ 목 적

-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문제가 확산되고 값싼 수산물들이 무차별 수입되어 학교급식에 반입될 우려됨. 그에 따라 학생들의 건강도 해칠 우려가 큼
- 이에 도내 학교급식에 방사능 오염 식재료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과 대안을 제시

■ 일 시 : 2013년 9월 둘째 주(일정은 협의 후 조정)

■ 장 소 : 추천가능

■ 주 최 : 강원도 교육청

■ 주 관 : 방사능오염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마련을 위한 강원대책위

■ 내 용

- 방사능위험 실태와 안전한 먹거리 기초강연
- 방사능 오염에 대응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방안에 대한 토론 및 질의응답

■ 세부 프로그램

순 서		진 행 자	예상 소요시 간(분)
개회사 및 참석자 소개		김 정 애 (춘천무상급식네트워크 대표)	5
주제발표1	방사능 시대와 먹거리 현황과 전망	김 익 중 (동국대 의대교수)	40
주제발표2	학교급식 시스템의 과제: 방사능 대응 안심 농수산물	김 승 기 (횡성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장)	20
지정토론	강원도의원 1명	각 5분씩 발언	30
	강원도교육청 관계자 1명		
	국립동해검역소 관계자 1명		
	학교급식 영양사 1명		
	방사능 대응 강원 대책위원 1명		
	학부모 1명		
질의응답 및 마무리		김 정 애 (춘천무상급식네트워크 대표)	30

■ 예산안

항 목		수 량	예산액	비고
발제 및 원고료	1) 주 발제자	1명	50만원 * 1명 = 50만원	
	2) 부 발제자	1명	30만원 * 1명 = 30만원	
	3) 사회자 및 지정토론자	7명	20만원 * 7명 = 140만원	
소 계			220만원	
자료집 제작		100부	50만원	
현수막 제작		3개	8만원	
장소대여료		3시간	20만원	
다 과			10만원	
합 계			308만원	

[별첨4]

보도자료5- 경향신문 8월 14일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학교급식 방사능에 안전한 식재료 공급”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14일 간부회의에서 “방사능 오염 농수산물에 대한 학부모들의 걱정이 높아지고 있다”며 “학교급식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민 교육감은 “성장기 학생들을 위해서는 보다 강화된 안전 기준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 급식 사용되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철저히 검증하고, 정기적으로 공인기관에 의뢰해 방사능 오염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은 오는 9월부터 매월 1회 5개 권역별로 3개 학교씩 모두 15개교를 무작위로 선정해 급식에 쓰이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방사능 오염 여부 검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방사능 잔류 검사소 설치, 지역교육지원청별 간이 방사능 검사기 도입, 관련 조례 제정 등 학교급식 안전도를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송선호 강원도교육청 학교급식담당은 “정부에서 방사능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학부모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교육감이 이같은 지시를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토론 4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누가 지켜줘야 하는가

서울 25개구 어린이집 급식, 수산물원산지 관리실태 정보공개청구 결과

강언주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간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누가 지켜줘야 하는가

- 서울 25개구 어린이집 급식, 수산물원산지 관리실태 정보공개청구 결과 -

강언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사고 이후 일본정부는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복구작업을 하고 있지만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 같다. 지난 8월에 이어 최근에도 고농도의 방사능오염수가 유출되었고 바다뿐만 아니라 지하수에 까지 침투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본 생태계 전반의 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후쿠시마 인근지역 어린이들의 건강실태 조사결과 소변에서 세슘이 발견되는 등 지역주민, 특히 방사능에 민감한 아이들의 내부피폭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 가장 가깝고, 일본에서 농수산물 및 식품 등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먹거리 안전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는 뒤늦게서야 일본 8개현에 해당하는 지역의 수산물수입을 전면 금지하였지만 그 외의 수입되는 수산물을 비롯한 가공식품에 대한 규제조치는 여전히 이뤄지고 있지 않다. 또 최근 원산지를 위반한 일본산 고등어가 대량으로 유통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어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은 날로 더해지고 있다.

방사성물질의 피폭이 성인보다 아이들에게 더 치명적이라는 것은 증명된 사실이다. 그래서 학교급식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얼마 전 녹색당에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안’을 제시한 바있다. 학교급식에 대한 녹색당의 조례제정제안과 더불어 어린이집, 영유아보육시설 등 집단급식을 하고 있는 곳들의 수산물원산지 관리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느꼈다. 정보공개센터는 우선적으로 서울시 25개구 어린이집 급식과 관련해 녹색당과 공동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정보공개청구 이후의 진행과정과 공개된 정보를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내용>

1. 서울시 관할 25개구에 위치한 국공립/ 서울형 / 민간 어린이집의 급식현황
- 2012년부터 현재까지 각 어린이집별 급식 식단표 (일자별, 끼니별 구분공개)
2. 어린이집별 수산물 납품업체현황
- 어린이집명(국공립, 서울형, 민간 등 형태구분바람)/ 급식학생수/ 납품업체명/ 납품품목/ 납품수량/ 원산지 / 비고(냉장, 냉동 등의 형태)
3. 서울형어린이집의 경우 급식재료 공동구매현황 (각 어린이집별 구분)
- 공동구매참여 어린이집 명/ 급식학생수 / 납품품목/ 납품수량 / 원산지 / 계약업체명 / 공동구매 예산지출

우선 식단표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각 구에서 운영하는 보육정보센터나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www.iseoul.seoul.go.kr)에 매일 급식의 사진을 찍어서 게시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급식사진을 게시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 게시하고 있더라도 사진만으로는 원산지의 확인여부는 갈음할 수가 없다. 몇몇 구립어린이집의 경우 자체적으로 영양 원산지등이 표기된 식단을 학부모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하지만 관할 구에서 이 내용을 확인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아니었다. 식단표는 보육정보센터에서 권고하는대로 하거나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교사들이 작성하고 있었다.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보육정보-우리동네어린이집-급식정보페이지 이미지갈무리>

수산물의 납품업체와 수산물원산지 표기 현황과 관련해서는 종로구, 마포구, 서대문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구에서 파악하고 있지 않아 정보가 부존재하다고 했다.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세 구중에서도 마포구의 경우 모든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를 파악한 것이 아니었다. '일부 수입산'이라는 표기로 원산지 정보가 미흡했다.

<25개 서울시 자치구 수산물 원산지 표시현황>

지역	수산물 납품(원산지 등)과 관련한 답변 내용	지역	수산물 납품(원산지 등)과 관련한 답변 내용
강남구	정보 부존재	서대문구	공개함.
강동구	정보 부존재	서초구	정보 부존재
강북구	정보 부존재	성동구	정보 부존재
강서구	정보 부존재	성북구	정보 부존재
관악구	정보 부존재	송파구	정보 부존재
광진구	정보 부존재	양천구	정보 부존재

구로구	정보 부존재	영등포구	정보 부존재
금천구	정보 부존재	용산구	정보 부존재
노원구	※ '국내산 위주'라는 통일된 답변	은평구	정보 부존재
도봉구	정보 부존재	종로구	공개함.
동대문구	정보 부존재	중구	정보 부존재
동작구	정보 부존재	중랑구	정보 부존재
마포구	공개함.		

각 구에서 어린이집을 관리·감독하는 부서는 '가정복지과', '여성복지과' '보육정책과' '여성정책과' 등이다. 청구 이후 이 부서들에 담당자와 통화할 당시, 위생이나 영양관리 측면에서는 관리감독하지만 원산지표기에 대한 관리는 하지 않는다고 했다. 수백여개의 관할 어린이집에서 매일 먹는 급식자재의 원산지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급식자재를 공동구매하는 서울형어린이집의 경우 각 구에서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는 파악하고 있으나 식자재의 원산지 정보는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서울형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도 자체적으로 납품계약을 맺거나 대형마트 등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일일이 관리할 수 없다고 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1)에 의해 각 구는 지역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동법의 시행규칙 4조2)에서 보육정보센터의 역할이 보육실태를 조사하는 것인데 보육실태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구청은 이와 연관된 모든 정보를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어린이집이 사능식품의 안전으로부터 완전한 사각지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녹색당에서 제안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조례안'과 같은 제도적 틀이 어린이집 급식뿐만 아니라 집단급식을 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에서 명시하듯이 모든 국민과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다. 어린이집과 관련한 사항들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지자체가 안전한 급식을 위해 조례제정과 같은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데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 1) 영유아보육법 제7조(보육정보센터)①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보육정보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보육정보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2)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4조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1. 어린이집의 환경 및 설비 / 2. 보육교직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 3. 어린이집의 지역별·유형별 분포 / 4. 어린이집의 정원·현원에 관한 사항 / 5. 보육내용 및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참고자료>

서울형 어린이집 식재료 공동구매와 50명 이상 시설현황

지역	서울형어린이집 공동구매 참여 현황 (개소)	서울형어린이집 공동구매 대상 아동수(명)	50명 이상인 시설 수(개소)
강남구	35	1,002	3
강동구	77	4,363	39
강북구	86	4,693	40
강서구	169	7,002	51
관악구	124	5,306	40
광진구	86	5,218	39
구로구	134	6,906	59
금천구	77	3,616	29
노원구	177	6,704	43
도봉구	260	불확실	불확실
동대문구	83	4,333	32
동작구	70	3,791	30
마포구	82	4,520	36
서대문구	31	947	5
서초구	33	2,692	22
성동구	45	3,282	32
성북구	198	불확실	불확실
송파구	82	불확실	불확실
양천구	93	5,170	38
영등포구	31	1,306	8
용산구	30	불확실	불확실
은평구	84	4,135	31
종로구	34	2,149	17
중구	32	2,195	15
중랑구	118	6,446	50
합계	2,153	79,330	609